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close-up, slightly blurred image of Euro currency.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everal Euro coins, including 1 Euro and 2 Euro pieces, and a 100 Euro banknote. The lighting is soft, and the colors are muted, giving it a professional and academic feel.

“그리스 사태로 보는 유럽재정위기의 이해와 전망”

2012. 06. 22 (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7층 SKT 홀

주관: 한양대학교 글로벌경쟁력센터(GCC)
후원: 한양대학교 경영연구소
글로벌 리서치의 혁신자 Kephass
한양대학교 글로벌 지식봉사 동아리 F.B.I.

Introduction

“유럽의 단일통화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지 그 시기와 여건, 궁극적 결말
을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 마가렛 대처의 저서, “Statecraft” (2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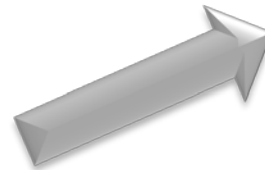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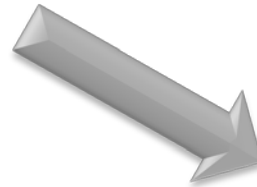
Framework

EU와 유로단일화의 구조적 문제

- 채권금리 착시효과
- 통화정책 사용불능
-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
- 최적통화이론 불충족

그리스 자체 내부문제

- 포퓰리즘적 정부지출
- 탈세 / 부패 / 연고주의



그리스
재정위기

발표목차

I. EU와 유로화의 구조적 문제

(백지은 / 박신영)

II. 그리스 위기의 현황과 정치경제적 배경

(김진영 / 서준수)

III. 그리스 위기를 초래한 그리스 내부 문제점 분석

(주현우)

IV. 유럽위기의 향후 전망과 한국경제

(CJ그룹 고문 김경원 박사)

1. EU와 유로화 출범의 배경
2. 유로화의 태생적 문제
3. 유럽위기 현안



I . EU와 유로화의 구조적 문제

(백지은/ 박신영)

1. EU와 유로화 출범의 배경

유럽통합의 원래 목적은 “전쟁방지”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초토화

- 세계경제의 중심은 미국, 일본 등으로 넘어감

□ 유럽국가 간의 전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유럽통합”을 구상

- 초기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공업이 국제적으로 감시받아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 모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한 것
- 1870~1940년 사이 독일과 프랑스간에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으나, 1940년 이후 유럽에는 평화가 유지
 - 단, 유고슬라비아 해체, 키프로스 내전,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어업관할권 분쟁 제외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연합을 선택

- 또한 마셜 플랜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탄생
 - OEEC는 1950년 유럽결제동맹을 낳음
- 1950년대 서유럽 지도자들은 경제연합이 곧 정치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
 - 1957, 로마조약에서 유럽경제 공동체(EEC)를 수립했으나, 그 궁극적 목적은 정치연합
- 1970년대 들어 통화통합 논의가 되며 '베르너 보고서'가 작성됨
 - 이는 1980년까지 유럽 공통체 국가들의 완전한 통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애매모호한 언어와 미온적인 타협안으로 가득하다"고 표현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연합을 선택

□ 1979 유럽통화제도(EMS)가 설립됨

- 환율조정장치에 의해 가맹국간 환율변동을 $\pm 2.25\%$ 로 고정

□ 1989 유럽통화연맹에 관한 '들로르 보고서'가 발표됨

- 들로르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칼 오토 폴은 보고서가 '혼란스러운 결과물'이었다고 묘사
- 경제적으로 일관성이 없었고 명백한 오류들이 발견

독일을 묶어 넣은 프랑스

- 1989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 총리 콜(Kohl)을 설득하여 통화연맹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
 -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의 정치, 경제, 통화연맹을 위한 뼈대가 되었음
 -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1999년 1. 1부로 환율을 완전 고정하고, 유럽단일화폐를 도입하며 화폐통합정책을 유럽중앙은행으로 이관하기로 함
 - 이 조약을 통한 프랑스의 의도는 독일의 금융패권을 무너뜨리고 분데스뱅크(독일중앙은행)가 유럽통화정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

독일을 묶어 넣은 프랑스

□ 반면 독일의 콜 총리는 통화연맹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프랑스로부터 독일통일에 대한 승인을 확보

- 과거 영국의 대처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통일 독일은 호전국가가 될 것임을 우려하여 백방으로 막으려 한 바 있음
- “독일이 프랑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마르크화를 희생해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독일경제학자 한스 베르너 진, 1996)
- 하지만 독일의 기업들은 마르크화에 대해 계속 평가절하를 해대는 유럽 내 국가들(예: 이탈리아)과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단일통화 추진에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 다음의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이 충족되면 통화연맹 가입

1. 통화연맹에 참가하려면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가의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1.5%이상 높으면 안됨
2. 통화연맹에 참가하려면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가의 평균보다 장기금리가 2%이상 높으면 안됨
3.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장치를 따라야 하며, 연맹가입에 선행하는 2년 동안 가맹 통화가 평가절하를 겪은 적이 없어야 함
4.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안됨. 적자는 꾸준히 3%에 가까워야 함. 또는 3%를 넘더라도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3%로 유지되어야 함
5.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안됨. 만약 60%를 넘는다면 국가채무를 충분히 줄여야 하며 만족스러울 만한 속도로 60%에 가까워져야 함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 이 밖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하는 아래 두 가지 조항이 훗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이 조항들에는 독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 첫째, 국가 중앙은행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은 어떤 종류의 정부 재정적 자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됨
 - 둘째, 조약은 구제금융 금지조항을 명시

유럽통화제도의 일시적 위기

□ 1993년 위기를 겪으며 유럽통화제도는 일시적 위기에 직면

- 벨기에의 국가채무는 GDP의 141%, 이탈리아의 국가채무는 116%를 기록,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의 10%, 핀란드는 8%, 벨기에와 스페인은 7%, 프랑스는 6%, 그리고 독일은 3%에 달함
-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는 독일의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동독과 서독의 경제차이로 인해 통화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독일정부는 고금리를 초래하는 금융긴축정책을 실시 (유럽통화제도 내의 다른 국가들은 자국 화폐와 마르크화 간의 환율을 유지해서 고금리의 피해를 봄)
 - 둘째, 환율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투자자들이 수렵게임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자본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무위험 거래)을 함

SGP에 합의했으나, 모두들 규정을 위반

- 1996년 12월 더블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안정 및 성장 협약 (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통해 새로운 기준에 합의
 - 유로화의 가치와 금리의 안정을 위해 각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미만으로 묶고 국가채무를 6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 이것은 유로화 출범 이후의 통화가치 안정을 목표로 독일이 고안한 장치로 한 회원국의 경제불안이 다른 회원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함
 - 그러나 그 이후로 30건이 넘는 과대재정적자 사례가 발생했으나 EU내에서 한번도 제재조치가 된 적이 없음
 - 유럽 각국은 1999년으로 합의된 유럽통화연맹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
 -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통화연맹 가입 수렴조건을 맞추기 위해 통계조작에 가담
 -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가 통계조작의 유력한 용의자이고 심지어 독일마저 규정을 살짝 위반

우려의 눈길 속에 유로화 출범

- 한편 일부 학자들은 유럽통화연맹에 강력히 반대하거나 우려의 눈길을 보냄
 - 1998년 2월 155명의 독일교수들이 유럽통화연맹의 출범을 연기하라고 공개서신을 보냈고 심지어 일부 학자는 유럽통화연맹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냄
 -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유럽통화연맹은 큰 오판이라고 경고
 - “유로화가 성공을 거둘 확률은 매우 낮다” (밀튼 프리드먼)
 - “통화연맹이 유럽 간의 전쟁을 방지하기는커녕 전쟁을 초래할 것” (마틴 펠드스타인)

- 그러나 1999년 유럽통화연맹은 현실화 되었고, 2002년 가맹국들의 통화가 유로화로 대체됨

우려의 눈길 속에 유로화 출범

- 한편 일부 학자들은 유럽통화연맹에 강력히 반대하거나 우려의 눈길을 보냄
 - 1998년 2월 155명의 독일교수들이 유럽통화연맹의 출범을 연기하라고 공개서신을 보냈고 심지어 일부 학자는 유럽통화연맹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냄
 -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유럽통화연맹은 큰 오판이라고 경고
 - “유로화가 성공을 거둘 확률은 매우 낮다” (밀튼 프리드먼)
 - “통화연맹이 유럽 간의 전쟁을 방지하기는커녕 전쟁을 초래할 것” (마틴 펠드스타인)
- 그러나 1999년 유럽통화연맹은 현실화 되었고, 2002년 가맹국들의 통화가 유로화로 대체됨

현재 EU회원 27개, EMU회원 17개국

EU회원국 변화

연도	총 회원 국수	EU회원국
1951	6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973	9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981	10	그리스
1986	12	포르투갈, 스페인
1995	15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2004	25	몰타, 키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2007	27	불가리아, 루마니아

EMU(유럽통화연맹)회원국 변화

연도	총 회원 국 수	EMU회원국 (유로통화를 쓰는 곳)
1999	11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2001	12	그리스
2007	13	슬로베니아
2008	15	키프러스, 몰타
2009	16	슬로바키아
2011	17	에스토니아

출처: Andreas Staab 저서, "The European Union Explained"(2011), p.132

EU관련 주요 조약 및 사건

조약	서명일	효력발생일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1	1952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	1958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1957	1958
EMS(European Monetary System)	1979	
Single European Act	1986	1987
Treaty on European Union(Maastricht Treaty)	1992	1993
Treaty of Amsterdam	1997	1999
EMU(European Monetary Union)and Euro was launched	1999.1	
Treaty of Nice	2001	2003
Lisbon Treaty	2007	2009

초기 10년간 유로화는 성공적

□ 유로화 통합초기 유럽국가들은 경기 활성화로 상당한 혜택을 보았다

- 독일의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상황에서 유로화로 인한 저환율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음
- 그리스 등은 자신의 신용보다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되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었음
 - 실제로 화폐통합이 임박하자 시장이 유럽국가들의 부채위험을 동일시하는 착시 현상이 발생

□ 하지만 남유럽에는 버블 현상이 나타남

-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채택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에 따라 남유럽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
- 이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에 버블 현상이 나타나게 됨
 - 버블현상: 투자, 생산 따위의 실제의 조건이 따르지 않는데도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증권 시장이 가열되면서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현상

그러나 위기의 서막이 오름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유럽경제에 금융, 무역경로를 통해 충격을 줌
 - 호경기 때 감춰져 있었던 통화체제로서 유로존의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됨
 - 특히 경제구조에 취약한 PIIGS가 큰 타격을 입음
- 재정 악화로 인해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긴급금융지원을 받게 됨
 - 그리스 구제금융(2010.5.2): 3년간 1,100억 유로 지원
 - IMF와 유로존 회원국이 각각 300억, 800억 유로를 담당
 - 그리스 구제금융 직후 유로존 구제기금(EFSF)설립
 - 3년 동안 300억 유로의 재정감축, 2012년부터 국채발행을 가정
 - 국채시장 정상화, EU 경제는 회복세를 시현

□ 이 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던 PIIGS국가들도 차례로 긴급금융지원을 요청

- 아일랜드 구제금융(2010.11.21) : 850억 유로 지원
- 포르투갈 구제금융(2011.4.7) 등 : 3년간 780억 유로 지원

□ 게다가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범유로존의 문제로 인식

- 이탈리아의 높은 국가채무수준(GDP의 120%)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
- 이탈리아 위기설로 인해, 프랑스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했고, 이는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음

	1차 재정위기	2차 재정위기		3차 재정위기
국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내용	구제금융(2010.5.2) - 3년간 1,100억 유로 지원	구제금융(2010.11.21) - 850억 유로 지원	구제금융(2011.4.7) - 3년간 780억 유로 지원	국채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산

2. 유로화의 태생적 문제

유로화와 통화연맹의 장점

- ☐ 화폐 환전비용이 들지 않음 (인플레를 억제하고 저금리를 유지)
- ☐ 단일통화지역내의 거래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경제 및 무역활동 증가
- ☐ 자국화폐 평가절하를 통한 보호무역의 위험이 사라져 개방성 증대
- ☐ 달러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
- ☐ 전쟁에 대한 위험 감소
- ☐ 남유럽 국가들에겐 독일의 낮은 금리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 (이것은 사실 치명적 단점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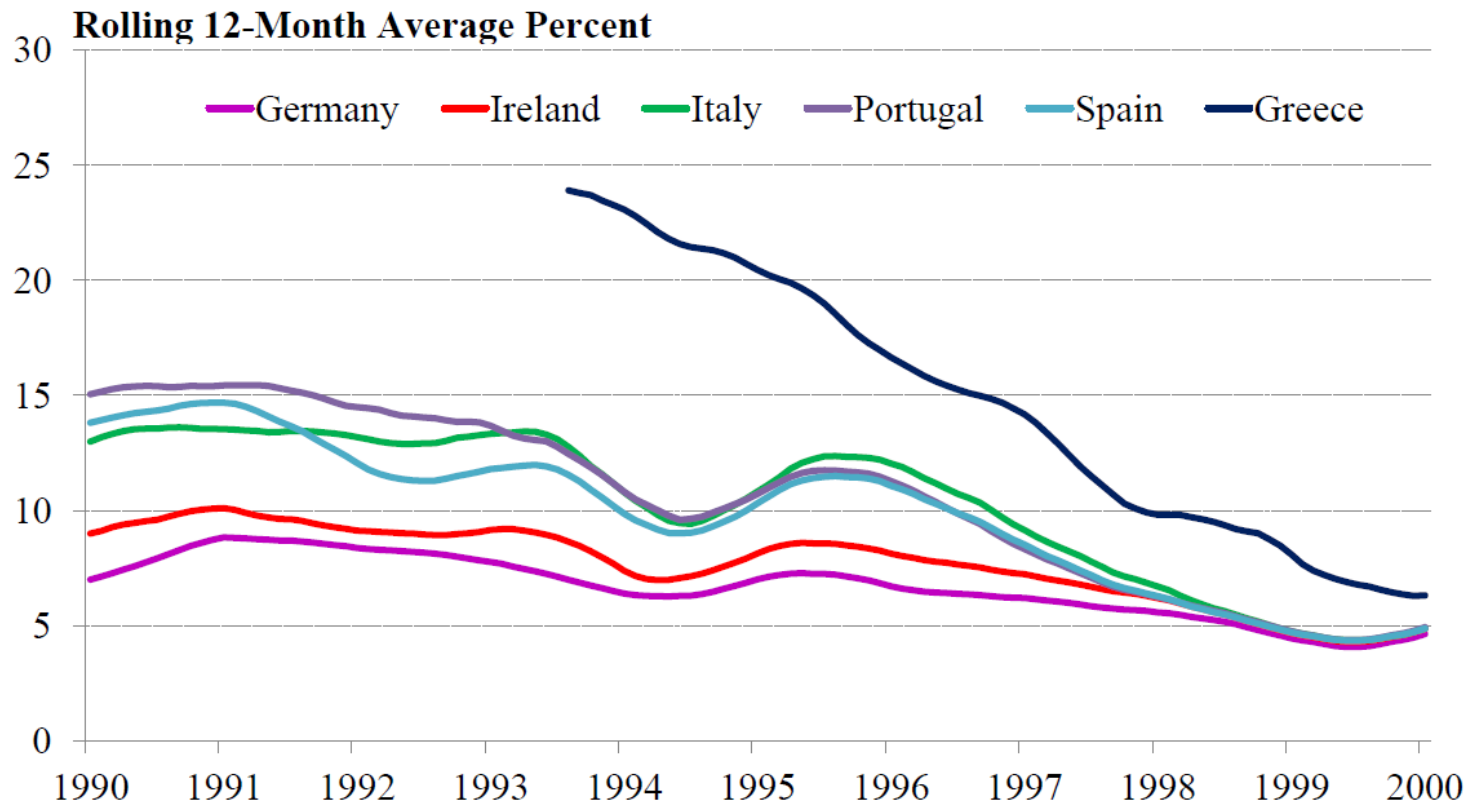
유로화와 통화연맹의 단점

- 단점 1: 금리 착시 효과
- 단점 2: 개별국가의 독자적 통화정책사용 불능
- 단점 3: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
- 단점 4: 최적통화지역 이론 불충족

단점 1: 금리 착시 효과

- 화폐통합이 임박하자 시장엔 유럽국가들의 부채위험을 동일시하는 착시현상이 발생

1990-2000년 사이 유럽 내 장기 이자율의 변화



출처: C. Waller, "Sovereign debt: A modern Greek tragedy" (20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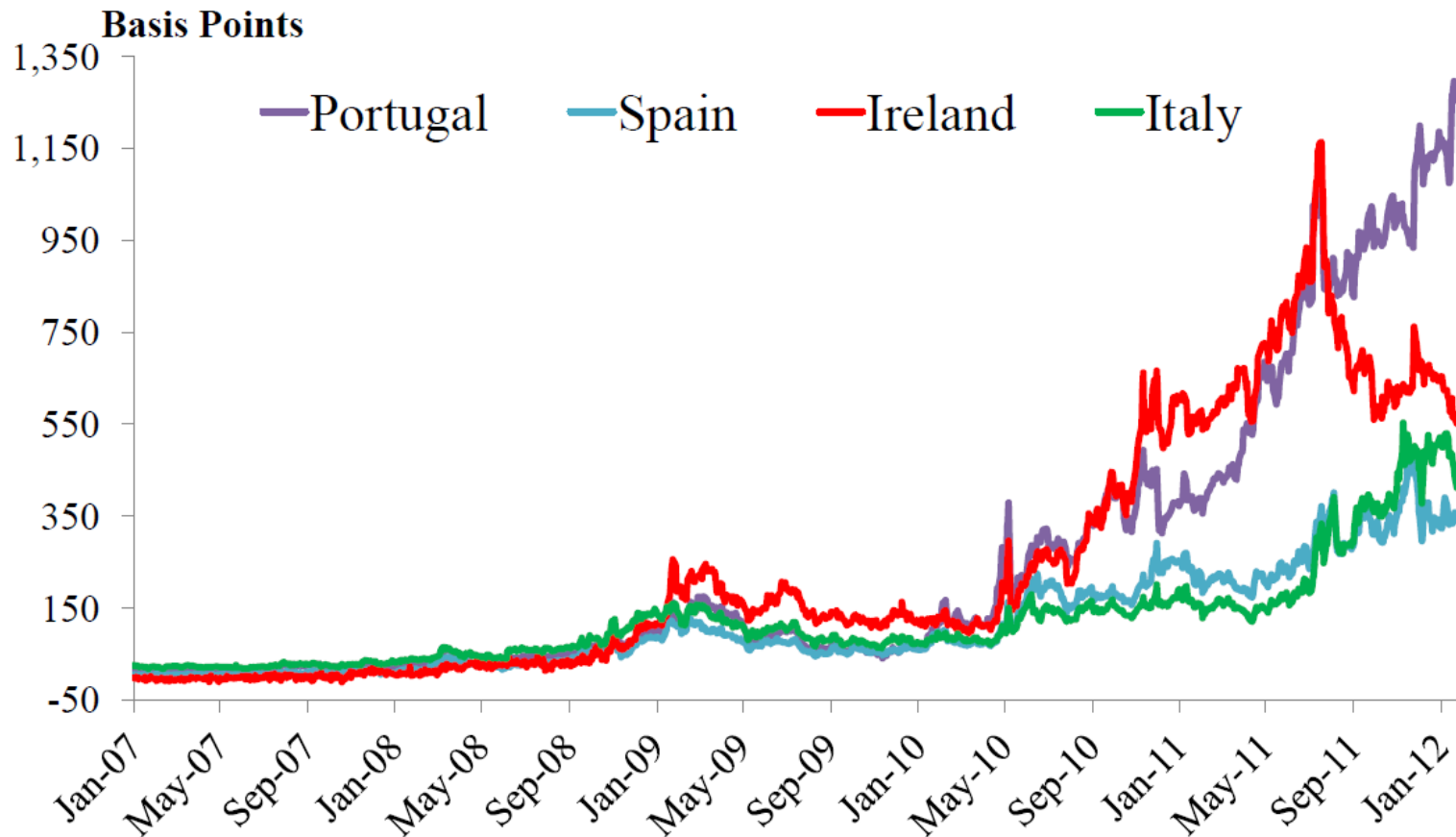
단점 1: 금리 착시 효과

- 금리착시 효과로 인해 남유럽 국가에 자금이 유입
-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경쟁력 상실
- 이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 확대

단점 1: 금리 착시 효과

□ 그러나 최근부터 시장이 유럽 각국의 위험을 달리 보기 시작

독일채권(10년만기)과 유럽 각국 채권의 Yield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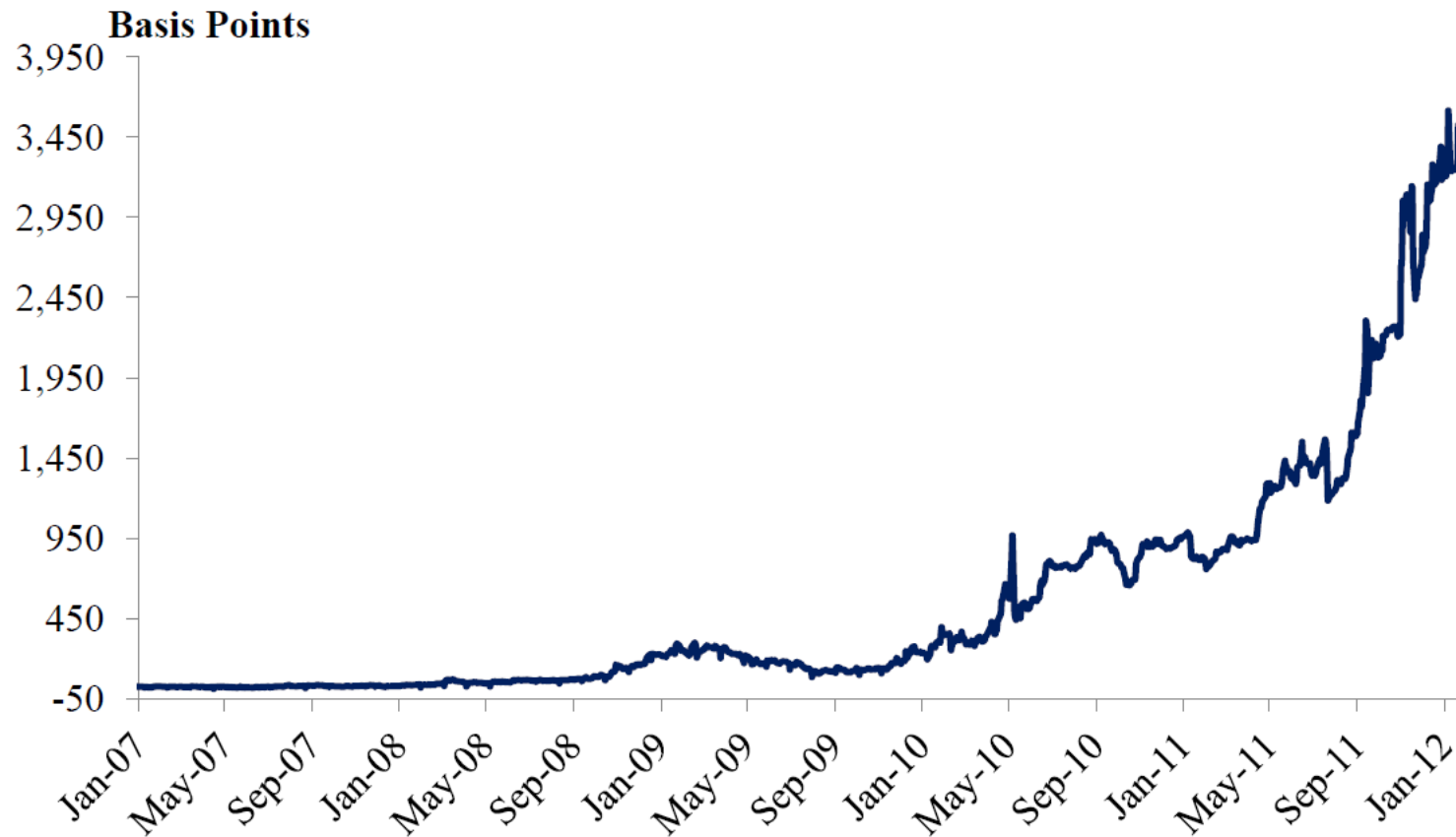


출처: C. Waller, "Sovereign debt: A modern Greek tragedy" (2012. 5)

단점 1: 금리 착시 효과

□ 그 중에서도 그리스는 특별한 아웃라이어(outlier)...

독일채권(10년만기)과 그리스 채권의 Yield Spread



출처: C. Waller, "Sovereign debt: A modern Greek tragedy" (2012. 5)

단점 2: 개별국가의 독자적 통화정책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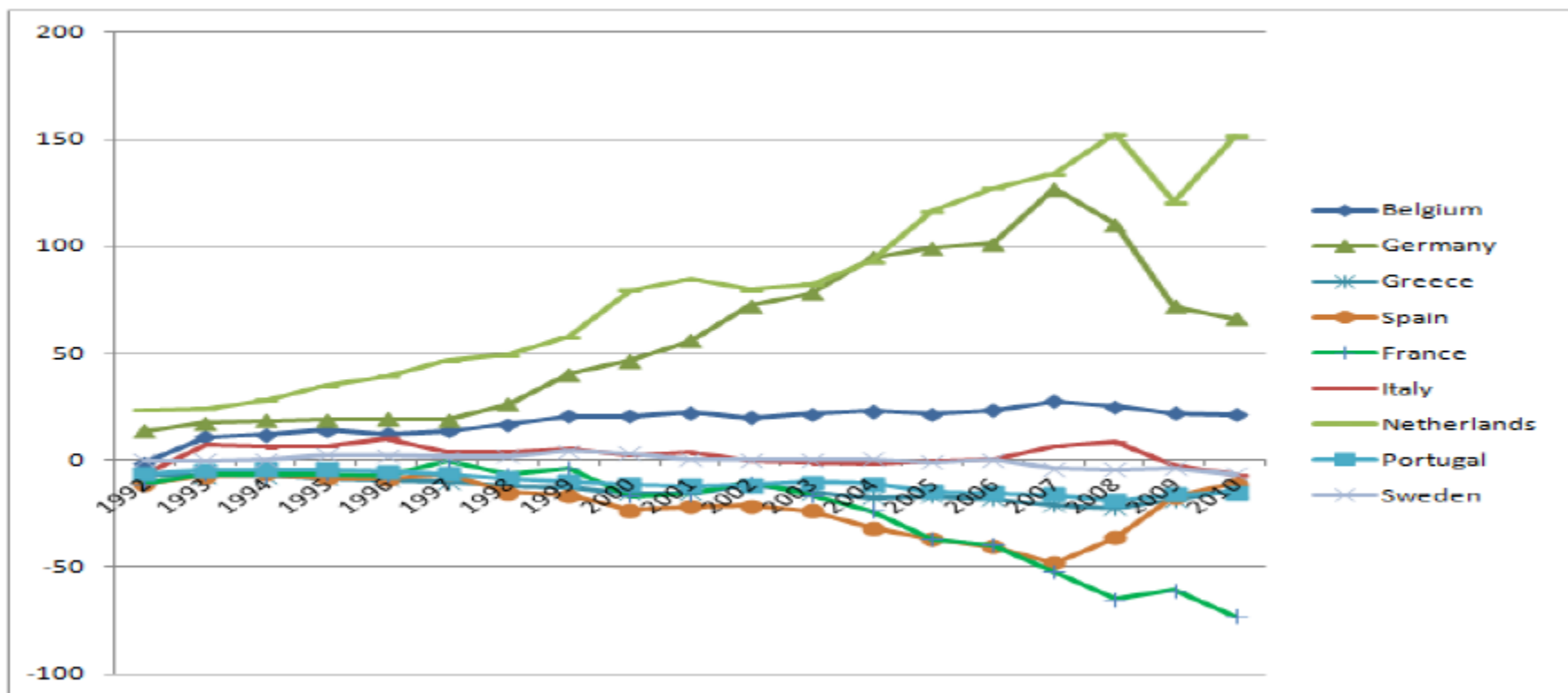
□ 환율조정 불가

- 역내 및 역외 무역불균형 야기
- 유로존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역내 회원국 간에는 매우 비대칭적 무역수지 패턴이 계속되어 옴
 -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데 반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매년 GDP의 10% 전후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축적
 - 유로존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외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 됨
- 단일 화폐가 도입될 경우 환율 조정을 통한 대외불균형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이중 구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됨
 - 2000년부터 추진해온 리스본 전략과 EU의 확대를 통해 회원국 간 소득과 경쟁력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단점 2: 개별국가의 독자적 통화정책 사용 불가

□ 역내무역불균형의 문제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무역수지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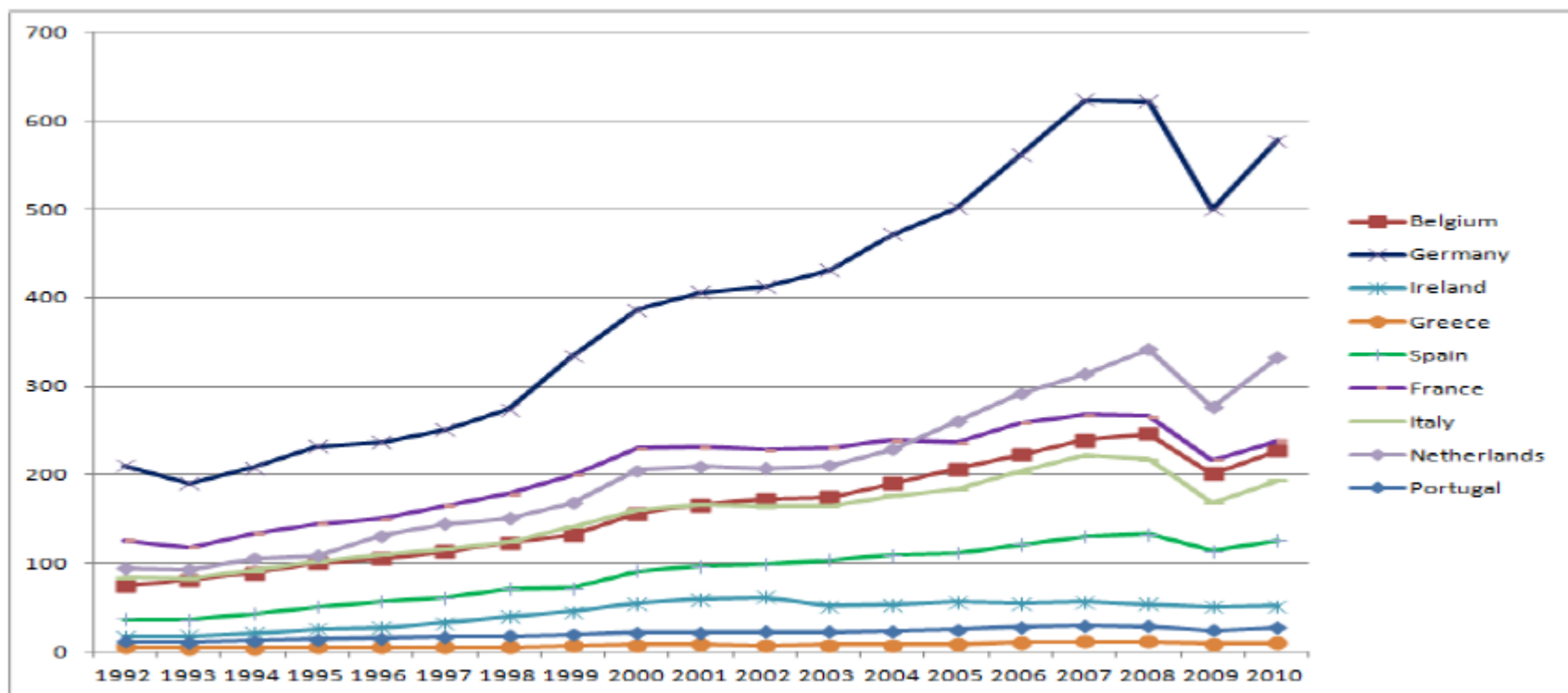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Ameco 데이터베이스,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문우식, 2012.4.)에서 재인용

단점 2: 개별국가의 독자적 통화정책 사용 불가

□ 역내무역불균형의 문제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수출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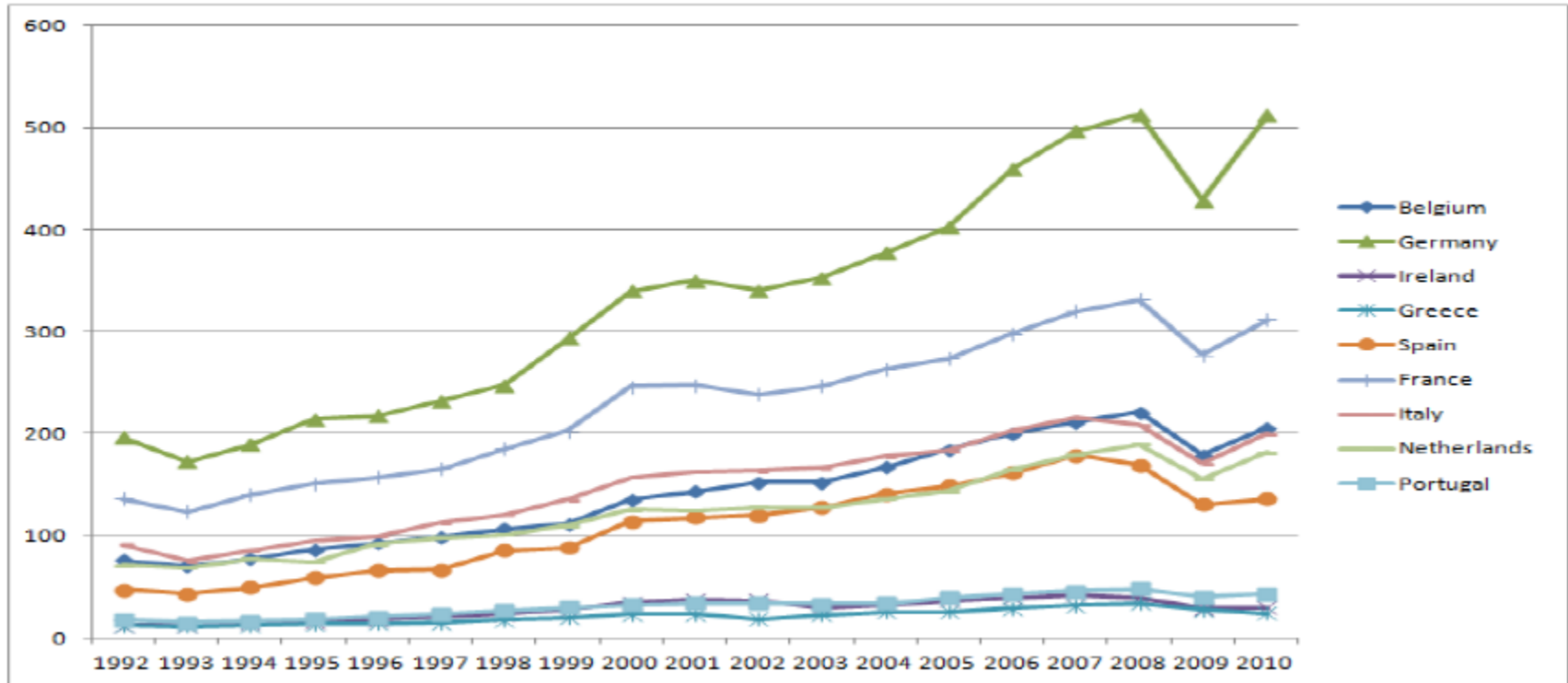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Ameco 데이터베이스,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문우식, 2012.4.)에서 재인용

단점 2: 개별국가의 독자적 통화정책 사용 불가

□ 역내무역불균형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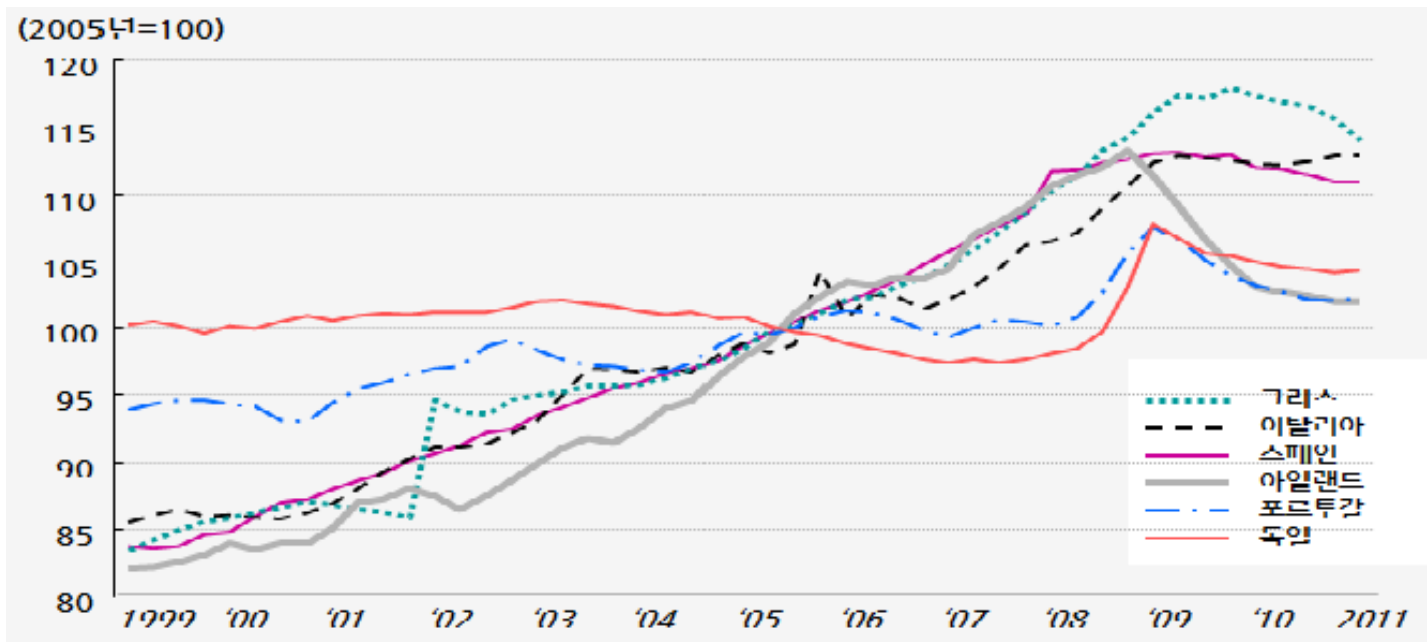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무역수지 (10억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 Ameco 데이터베이스,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문우식, 2012.4.)에서 재인용

단점 2: 개별국가의 독자적 통화정책 사용 불가

-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남유럽 국가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함
 - 특히 유로화 도입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차입여건이 대폭 개선되었고, 유입자금 중 일부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타남(Gros 2012)
 -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은 임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해당 국가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남



단위당 노동비용 추이 (자료: 유럽통계청, 출처 2012.1 SERI이슈페이퍼 유럽위기 극복방안,김득갑)

단점 2: 개별국가의 독자적 통화정책 사용 불가

- 단일통화로 인해 개별국가가 통화정책(금리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재정정책만 사용 가능) 자연 재정적자가 증가
- 제도적으로도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단일 통화정책과 각 회원국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 예산, 규제정책이 혼재

단점3: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

- 회원국간에 정치통합과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유가 있는 국가에서 위기국가로의 재정이전이 불가능 (이는 리스본 조약에서 정부간 구제금융을 제한하자는 독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
 -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구제 금융 지원을 진행하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화폐 단일화 이후 재정 통합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림

단점 4: 최적통화지역 이론 불충족

□ 최적통화지역 이론

- 고정환율제도가 유지되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의 규모에 대한 논의이며, 화폐 통합에 대한 효과를 전망할 수 있음

최적통화지역 이론에서 제시하는 단일통화 사용의 조건	
1. 생산요소(특히 노동)의 유연성	유럽에서 실현되지 않음
2.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3. 재정 통합	
4. 정치 통합	
5. 금융 통합	
6. 국가 간 유사한 물가상승률	
7. 개별국가 경제의 개방 정도	
8. 개별국가 경제의 다각화 정도	

-
- 유로화의 경우 정치 통합과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생산 요소 및 가격과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최적통화지역에 적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을 통화가치가 반영하지 못해 통화가치가 높은 주변국들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 ⇒ **역내무역불균형의 문제**
 -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도하게 유입한 자본이 이번 금융위기의 불씨가 된 자산 가격의 버블을 불러옴
 - 그러나 재정통합의 불완전성은 유로존 국가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시간을 지연시켰을 뿐, 그 자체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음
 - 스페인은 유로 도입 이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
 -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재정적자는 유로 도입 이전부터 진행

3. 유럽위기 현안

남유럽 국가들의 현황

□ 그리스

-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 위기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임
 - '그렉시트(Greece + Exit)'로 표현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한 국가의 축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파급력을 상상하기 어려움
 - 실제로 지난 6개월여 이어진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은 그리스 내부 뿐 아니라 유로존과 세계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을 증가
 - 1차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급부상으로 제기된 구제금융지원 중단과 유로존 탈퇴 우려는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림



남유럽 국가들의 현황

- 지난 17일 치러진 2차 총선이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공약한 신민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지난 한 달간 국제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리스발 '유로존 붕괴'는 일단 진정될 전망이다
 - 보수우파 신민당과 중도좌파 사회당, 민주좌파가 손잡은 그리스 좌우연정이 이르면 19일 출범할 예정 (2012.06.19)
 - 이에 따라 총선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졌던 그리스 정치 불안은 해소될 전망이다. 연정체제가 출범하더라도 구제금융 재협상, 긴축이행 등을 둘러싼 극도의 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남유럽 국가들의 현황

□ 스페인

-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및 경기침체 진입으로 인해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2011년 4/4분기에 이어 2012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나, 현 상황에서 경기하락세를 전환시킬 만한 정책 마련은 어려움
 - 지난 13일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로 3단계 강등한 것은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도 급등함.
-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긴축예산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및 금융권의 부실 우려 등이 제기
 - 스페인 정부의 긴축예산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인데, 특히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남유럽 국가들의 현황

- 2007년까지 스페인 경제를 이끌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실업률 악화 및 관련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감축에 악재로 작용함.
 - 특히 금융권 부실여신이 최근 8%를 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의 60%(1,840억 유로)가 악성이거나 부실로 추정되고,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
- 특히 스페인이 제한적 구제금융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될 전망
- 이 경우 스페인의 빚을 갚아줄 자금이 유럽에 없다는 점과, 유로존 핵심 국가들이 스페인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이탈리아까지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경우 그 막대한 규모로 인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해지는 바, 최악의 경우 유로존이 붕괴되거나 재편될 가능성도 갖고 있음

남유럽 국가들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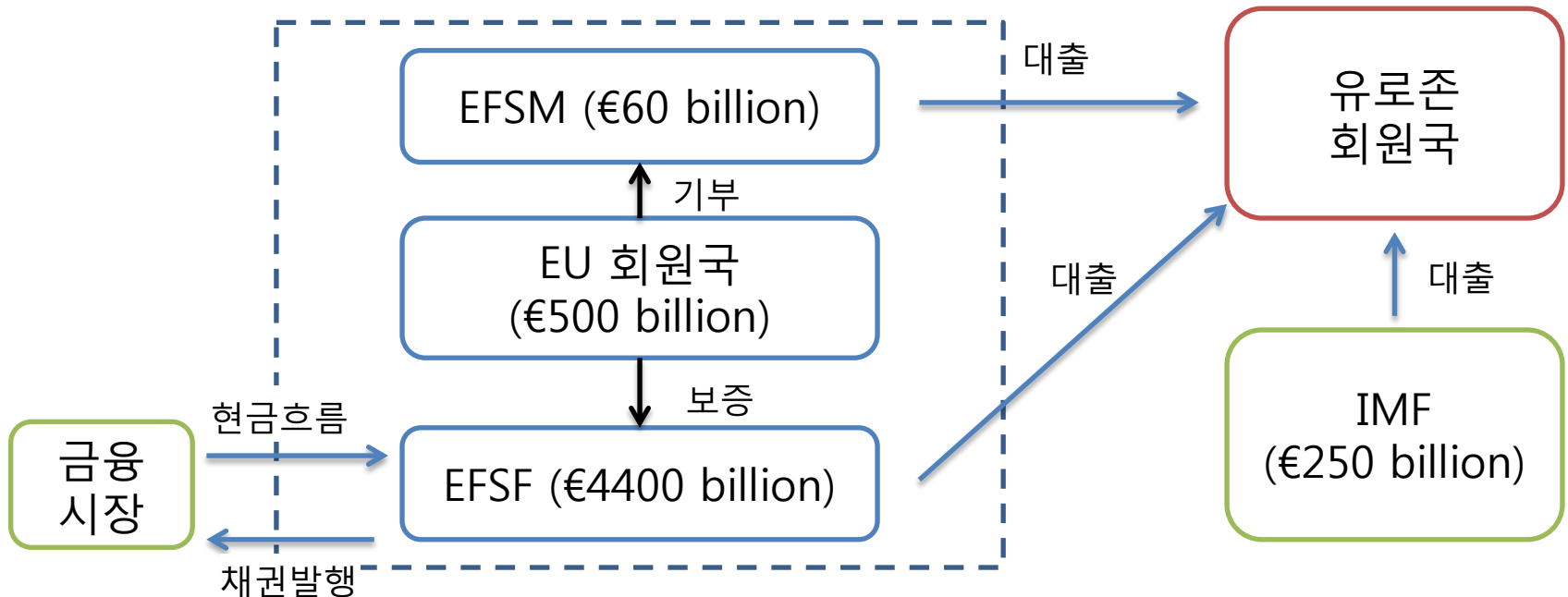
□ 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재정위기 상황이 다른 위기국가에 비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제2의 그리스에 비유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진정되는 동안 포르투갈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함
- 포르투갈 국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포르투갈 국채가 투자등급 채권 지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음
 - 포르투갈은 유로존과 IMF 구제금융으로 780억 유로를 지원받았지만 내년까지 개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100억 유로를 조달해야 함
 - 만약 실패할 경우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97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막지 못하게 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 재정위기 해결의 트로이카

- 현재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지휘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을 일컫는 용어
 -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 되자 이것이 다른 유로존 국가에 전염되는 일을 예방하고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본격 가동되어 대규모 긴축 및 부채 협상을 진행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 유로존 국가들을 위한 금융지원기구

- 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 유럽금융안정기구: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위기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목적기구
 - 4,400억 유로 규모로 2010년 6월 운영 시작
- EFSM (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 EU 집행위원회가 EU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 2010년 5월 운영 시작
-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유럽안정기구: 2013년 만료되는 EFSF를 대신해 영속적으로 위기 극복을 돕고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동성지원기구

유럽안정메커니즘 (ESM)

(단위: 억 유로)

		EFSM	EFSF		ESM(신설)
			현행	향후	
금융지원 한도		600	2,500	4,400	5,000
자본금	규모	600	4,400	미정	7,000
	구성	EU예산에 의한 연대보증	보증	미정	300: 납입자본금 6,200: 요구불자본금 보증
대출금리 산정		Euribor + 292.5bps	Euribor+247bps + EFSF운 영비		조달비용+200bps +100bps(3년 초과 대출)
국가채무 조정 시	투자손실 분담	없음	없음		있음
	채권자 지위 순위	1) IMF 2) EFSM	1) IMF 2) EFSF 및 민간투자자		1) IMF 2) ESM 3) 민간투자자
금융지원방식		대출	1) 대출 2) 발행시장 국채매입 (예외상황)		1) 대출 2) 발행시장 국채매입 3) (예외상황)
수혜국		EU 회원국	유로존 회원국		유로존 회원국
운영기간		2010.5~2013.6	2010.6~2013.6		영구적 운영
설립근거		리스본조약(122.2조)	유로존 정상 합의 (2010.05.09)		유로존 정상합의 (2011.03.25) EU조약 136조 (근거조항 추가 예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 4.). Quarterly Report on the Euro Area (박진호(2011. 8. 31.). "EMU 국가부도위기 대응과 전망 (2011-38)". 한국은행에서 재인용)

재정위기 극복 대안으로 등장한 유로본드

□ 유로본드의 발행

-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적기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만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음
 - EU는 EFSF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추가 자본 확충 여부가 중요
 - EFSF는 단순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탈피해 유로지역 국가의 국채 매입과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역할까지도 수행할 계획
- 추가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과 향후 역할 확대를 고려하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약 1조 4,200억 유로의 실질 대출여력이 필요
 - 유로지역 소속 17개국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로본드(Eurobond)를 발행하는 방안도 유동성 지원의 대안으로 대두

재정위기 극복 대안으로 등장한 유로본드

□ 유로본드 발행(안)

- 유럽채무기구(EDA: European Debt Agency)를 설립해 채권 물량과 발행 시기, 회원국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여 회원국에 유동성을 공급
 - 17개 회원국이 공동 보증하므로 재정위기국은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독일 등 신용도가 높은 국가는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효과
- EDA를 통한 자금조달은 회원국 GDP의 40%이내로 제한하며 나머지는 기존처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
 - 출처: Juncker, J.-C. & Tremonti, G. (2010.12.5). E-bonds would end the crisis, Financial Times.
- 최근에는 독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유로본드(유로빌), 또는 EU 조약을 개정 할 필요가 없는 유럽상환펀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

재정준칙의 강화를 위해 등장한 신재정협약

- **신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SCG)**
 - 경쟁력 협약(Competitiveness Pact) (2011.2): 유로존 내 경제 정책 조율이 목표, 재정 준칙에 초점
 - 신재정협약 수립(European Council Dec. 9, 2011): 17개 회원국이 동의
 -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서명 (Mar. 2, 2012)
 - 12개국이 비준 시 2013년 1월부터 시행
- **신재정협약은 독일 주도형 해법이며, 향후 재정위기 해결의 방향을 제시**
 - 재정준칙 없이, 재정통합은 있을 수 없음 (Without fiscal discipline, there will be no fiscal union)

	주요내용
합의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회원국 중 영국, 체코를 제외한 25개국 •체코의 경우 헌법상의 이유(의회비준의 난항)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향후 동참이 예상됨 •영국이 불참함으로, 본 협약은 EU 차원의 공동체 법이 아닌 EU공동체 외부에서 다수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임.
재정적자 상한선 (황금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금률(재정적자 GDP 3%, 국가채무 GDP 60%) 위반 시 벌금 부과 •부채상환이나 재정수입의 감소 등 '구조적 재정적자'시 GDP의 0.5%까지 추가 인정(재정적자 상한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 미만인 경우에는 구조적 재정적자를 1% 추가 인정 •재정적자 상한선을 헌법 또는 유사한 지위의 법으로 국내법제화 할 것 (독일은 2010년 이미 자체적으로 법제화, 2016년부터 시행) •재정적자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인 교정 메커니즘을 마련해 놓을 것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검증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재정 황금률 국내 법제화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시 ECJ에 제소 가능 •협약의 회원국이 재정 황금률을 국내법에 제대로 법제화(Transpose)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ECJ가 확인한 후 위반국 GDP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벌금은 유로화 사용국의 경우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재원으로 편입되고, 비유로화 사용국의 경우 EU 일반예산으로 편입됨
조정 메커니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 회원국은 국채발행 계획을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사전통보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의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이상 유로존 정상회의 개최
향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1~2일 EU 정상회의에서 공식서명 •12개국이 비준하면 협약발효, 2013년 1월부터 시행

자료: 신재정 협약의 주요 내용,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문우식, 2012.4.)에서 재인용

위기에 대응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

□ 독일

- 유로화 도입 당시 독일 국민의 55%는 독일의 유로존 가입에 반대했으나, 동서독 통일을 이끌고 EU의 기틀을 마련했던 당시 독일의 쾰 총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를 독일이 결코 다른 나라의 재정부실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함
-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로 독일의 부채책임론이 부각되자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76%가 유로본드 반대, 70% 이상이 EU 체제가 독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독일국민의 반EU 정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위기에 대응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

□ 프랑스

- 현재의 위기가 자국에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에 찬성하고 있음
 - 프랑스의 요구는 유로존 재정위기국가 국채를 담보로 ECB에서 자금을 계속 차용해 EFSF 자금지원규모를 최대치로 높이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프랑스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
 - 최근 주변국 재정 위험이 커지고 내부 정치 불안 등이 겹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급등
 - 프랑스 은행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투자한 액수는 무려 5천 169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독일 은행권은 3천 56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
 - 따라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난이 심해질수록 유로존 중심국으로서 부담이 늘어날 것은 뻔한 형편임

그 외 유럽 전체를 둘러싼 현안들

□ 독일을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

–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음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유로존	독일(20.2)	3.7	3.0	0.7	유로존	에스토니아(0.1)	2.3	7.6	1.6
	프랑스(15.7)	11.5	1.7	0.5		말타(0.05)	2.7	2.1	1.3
	이탈리아(12.2)	1.8	0.4	-1.4		유로존(73.5)	1.9	1.5	-0.3
	스페인(8.3)	-0.1	0.7	-1.8	비 유로존 (EU-15)	영국	1.8	0.7	0.6
	네덜란드(4.8)	1.7	1.2	-0.9		스웨덴	5.6	4.0	1.4
	벨기에(2.8)	2.3	1.9	0.0		덴마크	1.7	1.2	1.4
	오스트리아(2.3)	2.3	3.1	0.8	비 유로존 (CEECS)	폴란드	3.9	4.3	2.7
	그리스(1.8)	-3.5	-6.9	-4.7		체코	2.7	1.7	0.0
	아일랜드(1.4)	-0.4	0.7	0.5		헝가리	1.3	1.7	-0.3
	핀란드(1.4)	3.7	2.9	0.8		로마니아	-1.6	2.5	1.4
	포르투갈(1.3)	1.4	-1.6	-3.3		불가리아	0.2	2.2	2.3
	슬로바키아(0.4)	4.2	3.3	1.8		리투아니아	1.4	5.9	2.4
	룩셈부르크(0.3)	2.7	1.6	1.1		라트비아	-0.3	5.5	2.2
	슬로베니아(0.3)	1.4	-0.2	-1.4		EU-27	2.0	1.5	0.0
	키프로스(0.1)	1.1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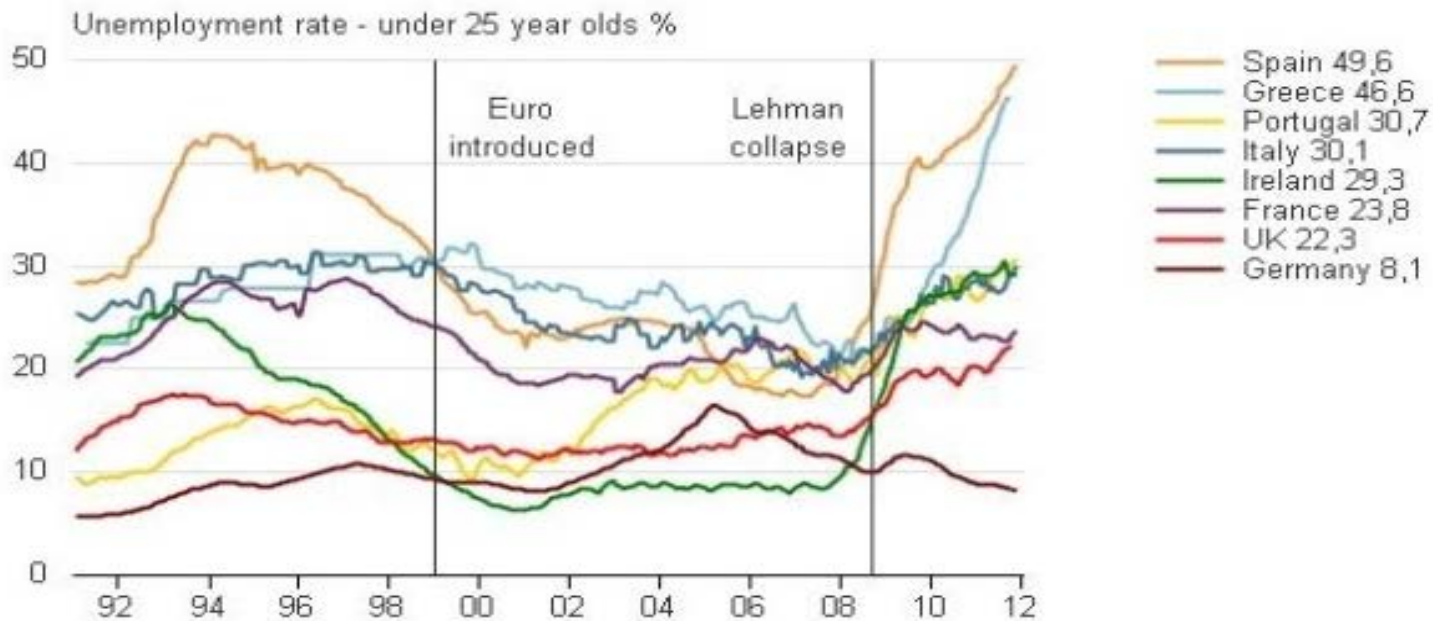
Note: () means GDP share of each country in the EU, Source: European Commission (May 2012)

KIEP 세미나 유럽재정위기의 추이와 해결방향(강유덕, 2012. 06 07)에서 재인용

그 외 유럽 전체를 둘러싼 현안들

□ 고용시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나 국가별 상황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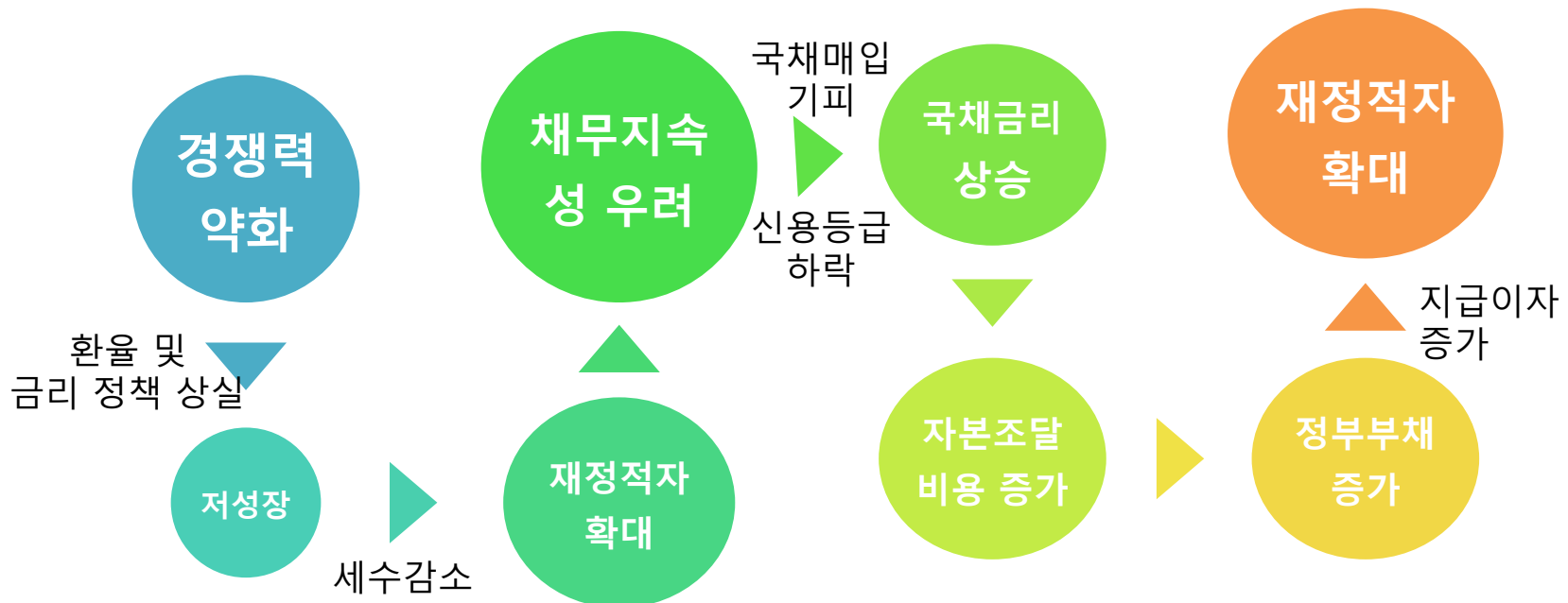
- 국가별 노동시장 정책/여건 등의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특히 청소년 실업률의 증가는 발생 국가의 사회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에 대한 불만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침



그 외 유럽 전체를 둘러싼 현안들

□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럽 주요 국가의 국가 신용등급이 연쇄 하락

- 그리스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을 넘어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전이되면서 이들의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금융 기관의 손실이 증가
- 유로존의 큰 축인 프랑스가 흔들리면서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



1. 그리스 경제 현황
2. 그리스 경제 지표
3. 그리스 위기의 정치경제적 배경

Ⅱ. 그리스 위기의 현황과 정치경제적 배경

(김진영 / 서준수)



1. 그리스 경제 현황

그리스 경제 현황 (2009 하반기)

2009

2010

2011

2012



파판드레우가 그리스 부채의 실제 규모를 언론에 공개하여 **그리스 경제 위기 가시화**

- 2009년 10월 그리스 파판드레우 정부가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면서 **재정위기 가시화**
 - 종전의 재정 적자 비율은 6%는 통계 조작에 의한 결과
- 2010년 3월 그리스 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성장 프로그램**'을 발표
- **그리스는 안정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긴축정책 시행**
 - 부가가치세 인상(19% → 21%) 과 공무원의 부활절, 성탄절, 휴가철 특별보너스 30% 삭감
 - 2010년 연금 동결과 유류세 8% 추가 인상
 - 담뱃세, 주류세 추가 인상과 고소득자 및 부유층 소득세 인상, 사치품 과세
 -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 → 12%)

그리스 경제 현황 (2010 상반기)

2009

2010

2011

2012



EU와 IMF가 공동으로 그리스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선언

- 5월 2일, 유로존(Eurozone)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3년간 1,100억 유로를 그리스에게 구제 금융 하는 것 확정(1,2차분 금융 지원 금액 전달)
- 5월 6일, 그리스 의회는 EU-IMF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강도 높은 추가적인 긴축조치를 승인
 - 공무원 임금과 연금 20% 삭감과 부가가치세 인상(21% → 23%)
 - 유류세 10% 인상과 부활절, 성탄절, 휴가철 특별보너스 철폐 등을 포함
- 5월 10일, 유럽 재무장관들은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구성을 발표 한데 이어, 6월 7일 세부 운영방안에 합의
 -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은 5,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IMF 2,500억 유로 별도 지원)과 강력한 재정 긴축 요구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및 회사채 매입 등 3개 축으로 구성

그리스 경제 현황 (2010 상반기)

2009

2010

2011

2012



그리스의 추가적 **긴축 정책** 시행과
이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그리스 시민

□ 그리스 국내 GDP 감소 가속화 -EU 긴급정상회의,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

- 그리스에 200억 유로(유로 회원국 145억 유로, IMF 55억 유로)의 1차 지원금 지급
- 그리스 채무 비중 142%로 09년 대비 상승

□ 무디스,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 2단계 하향 가능성 발표

- 그리스 경제 보호 법안에도 불구하고 경제 악화

□ 공공 및 민간 부문 파업과 도로 시위

- 아테네의 대중교통 운행과 항공편 운항이 마비
-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파업에 동참하여 대규모 학교 휴업



그리스 파업 실태

- 전국 총파업을 벌여 **항공, 대중교통, 학교, 병원, 언론** 등 주요 공공기능이 완전 마비 2010.02.25
- 총파업에 이어 **그리스 해운조합**이 24시간 작업중단을 선언 2010.04.27
- 그리스 **관세공무원** 파업 연장...통관 마비 장기화 2010.02.19
- 그리스 공공노조 이어 **택시** 파업 2010.02.11
-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총연맹에서 **그리스 전역**에 총파업 선언 2010.6.30
- 그리스 파업사태 '눈덩이' 긴축정책에 항의... 연합노조 다음주 총파업 2010.02.17
- 파업으로 그리스 전역의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됐고, 일부 국공립 **학교는 휴교**했다 2010.6.28
- 파업으로 인해 그리스 전역의 공항과 항만, 지하철, 학교 중요 관공서가 모두 문을 닫고 파업에 참여, 그리스 경찰은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내림
- 그리스 총파업...**모든 업무 정지** 2010.03.12
- 그리스 국채금리가 8%대로 치솟아 **또다시 번진 파업** 2010.04.23
- 그리스에서는 정부의 긴축 대책에 항의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끊이지 않고 있음** 2010 6.3



그리스 경제 현황(2010 하반기)

2009

2010

2011

2012



IMF와 EU의 금융위기 지원금 전달
과 함께 긴축 정책에 대한 압박

- 그리스 의회, 향후 3년간 1100억 유로(GDP의약 11%)지원 중 일부(3차분)를 받고, EU와 IMF의 압박으로 그에 따른 긴축프로 그램 승인
 -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 삭감, 세금인상 조치 포함
- 유로존 및 IMF의 그리스 지원 본격적 시작
 - 독일의회, 224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자금 지원 승인
 - IMF, 그리스에 대한 대기성차관(3년간 300억 유로)승인
 - EU 긴급재무장관회의, 5,000억 유로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조성 합의
 - 국제수지안정기금 600억유로 증액(500억유로 → 1,100억유로) 및 지원대상 확대(비유로 11개 회원국 → EU 27개 회원국)
- EU 집행위원회, EU 경제정책 공조강화방안
 - 그리스에 200억의 1차 지원금 지급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일부 독일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그리스에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도 팔아 빚 갚으라” 주장



그리스 경제 현황 (2011상반기)

2009

2010

2011

2012



그리스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하락과
긴축 정책으로 인한 **그리스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이중고를 겪는 그리스

□ 그리스의 1차 금융 지원의 미지급금에 대한 추가 지급 연기

- 2010년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가 지속적 파업과 엄청난 부채를 가진 그리스 금융위기를 탈출 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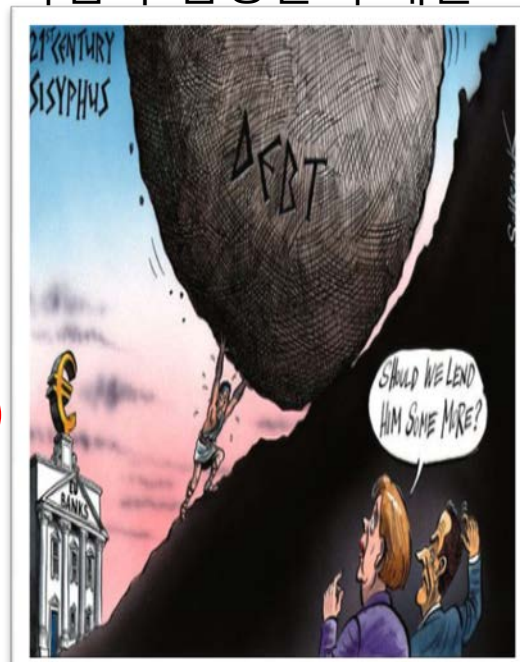
□ 그리스 디폴트 위험 상승으로 그리스 노동계 총파업

- 12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 무력 투쟁 시위

□ S&P그리스 신용 등급 B에서 C 로 재조정 (세계 최저)

□ 그리스 내각 조정으로 긴축 예산안 통과 박차

- IMF EU 지원금 4,5차 금융 위기 지원금 지급



그리스 경제 현황(2011 하반기)

2009

2010

2011

2012

□ 그리스 긴축 안 의회 통과, 디폴트 상황을 막음

- 유로존 그리스에 1천 590억 유로 지원 합의



유로존 중심의 2차 구제 금융 잠정 합의와 그리스 부채 탕감의 윤곽 결정

□ 유로존 정상회담 결과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잠정 합의

□ 유로존 중심의 그리스 구제 금융 10월 집행 결정하고 긴축안 계획 발의

- 그리스의 추가 긴축 안으로 노동계 총파업 재돌입

□ 그리스 부채 협상 재개 하여, IMF 기금 1조 달러로 증액, 부채 탕감 조율

- 그리스 부채 50%탕감의 새 구제안 윤곽

그리스 경제 현황(2012 상반기)

2009

2010

2011

2012



그리스의 긴축을 강하게 주장한
메르켈의 말에 따라 **그리스는 긴축 안
수용 후 법안 통과**

- 그리스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 금융 타결
- 유로존, 그리스 192조원 규모의 구제 금융 제공 확정 및 부채 탕감 실행
 - 그리스는 12일 민간채권단 보유의 국채에 대해 53.5% 손실률을 적용, 새로운 국채로 교환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무디스 그리스 신용등급 C로 강등
-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보수파인 신민주당 승리로 일시적인 안도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전망 지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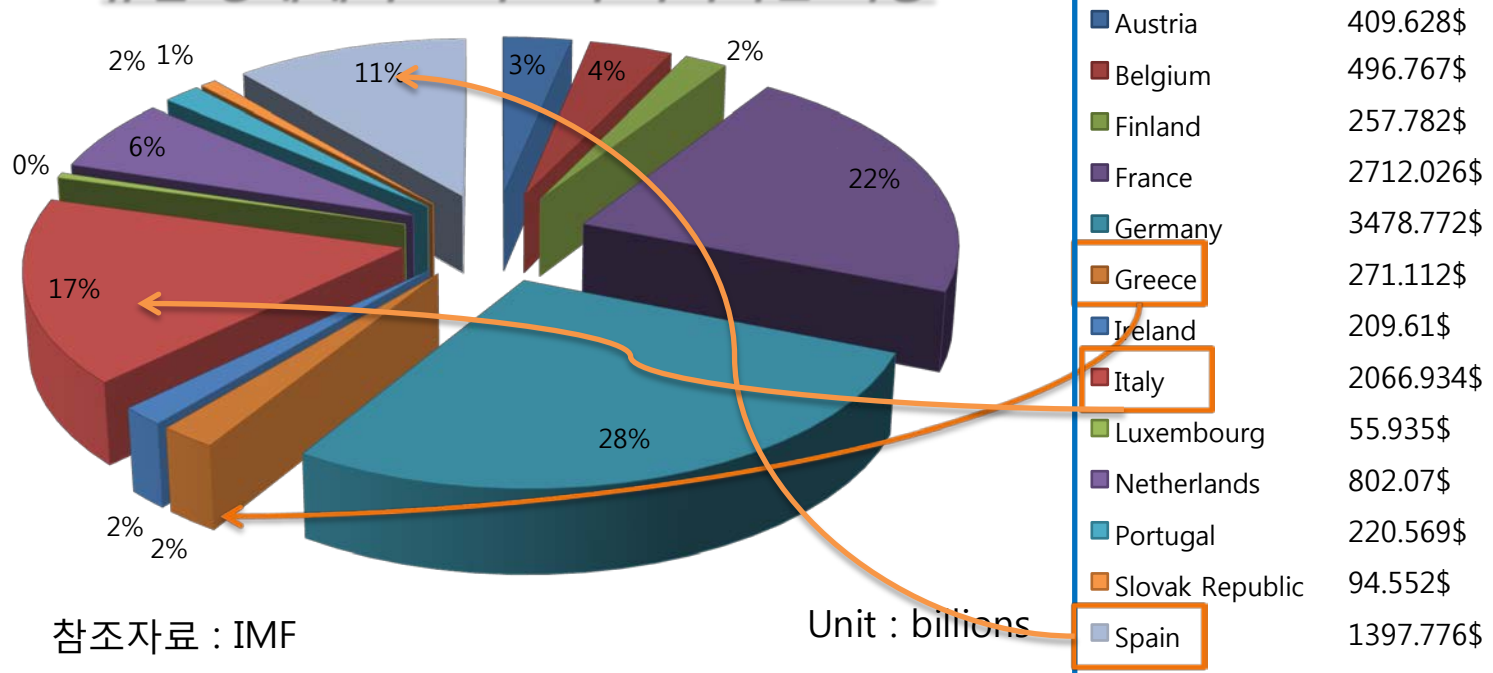
2. 그리스 경제 지표

작은 그리스 경제 규모에 비해 큰 영향력



- ☐ 그리스와 같은 국채 교환 요구 확산 시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폭(유로화 동맹)
- ☐ 경제 규모에 상관 없이 유로화 사용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럽의 저개발 국가들에 유입
 - 늘어난 자본은 버블을 양성하고 이것은 세수 기반이 약한 국가들을 시작으로 경제위기를 촉발
- ☐ 단일화폐로 묶여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더라도 화폐경쟁력에 직접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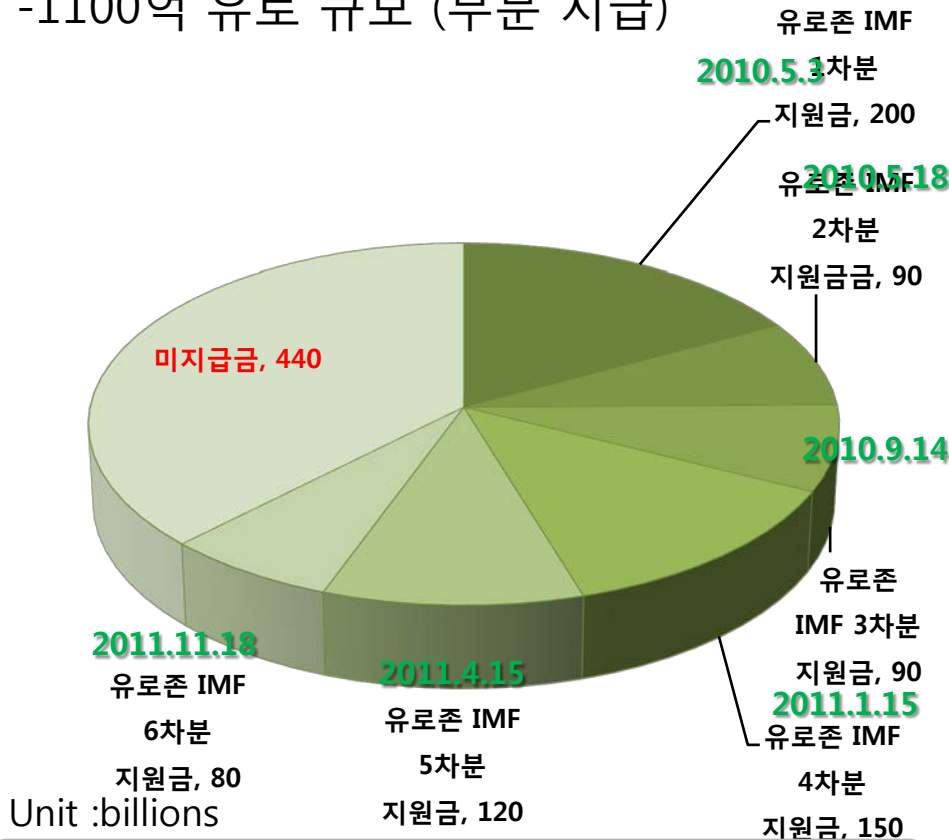
유럽 경제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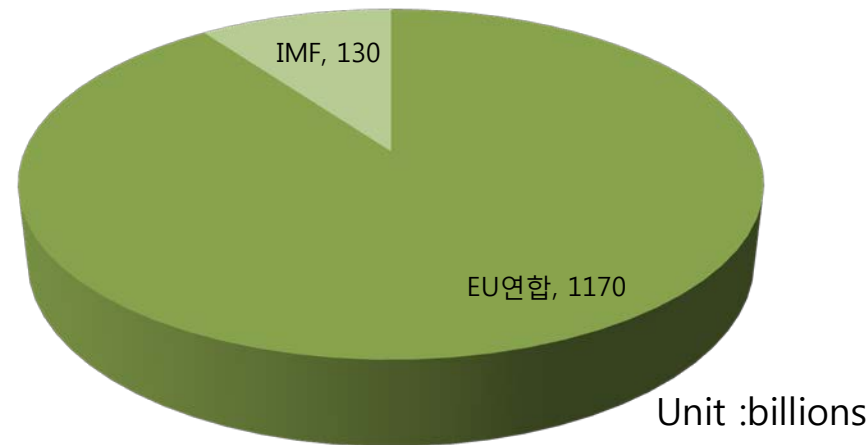
참조자료 : IMF

그리스 구제 금융에 지급된 총 금액

1차 구제금융에 지급될 총 금액
-1100억 유로 규모 (부분 지급)



2차 구제금융에 지급될 총 금액
-1300억 유로 규모 (미지급)



참조 :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그리스는 2012년 현재까지 1차 구제 금융 중 **730억**유로를 지원 받았음



1300억 유로의 EU연합 중심의 2차 구제 금융 기금을 지급 받을 예정 (2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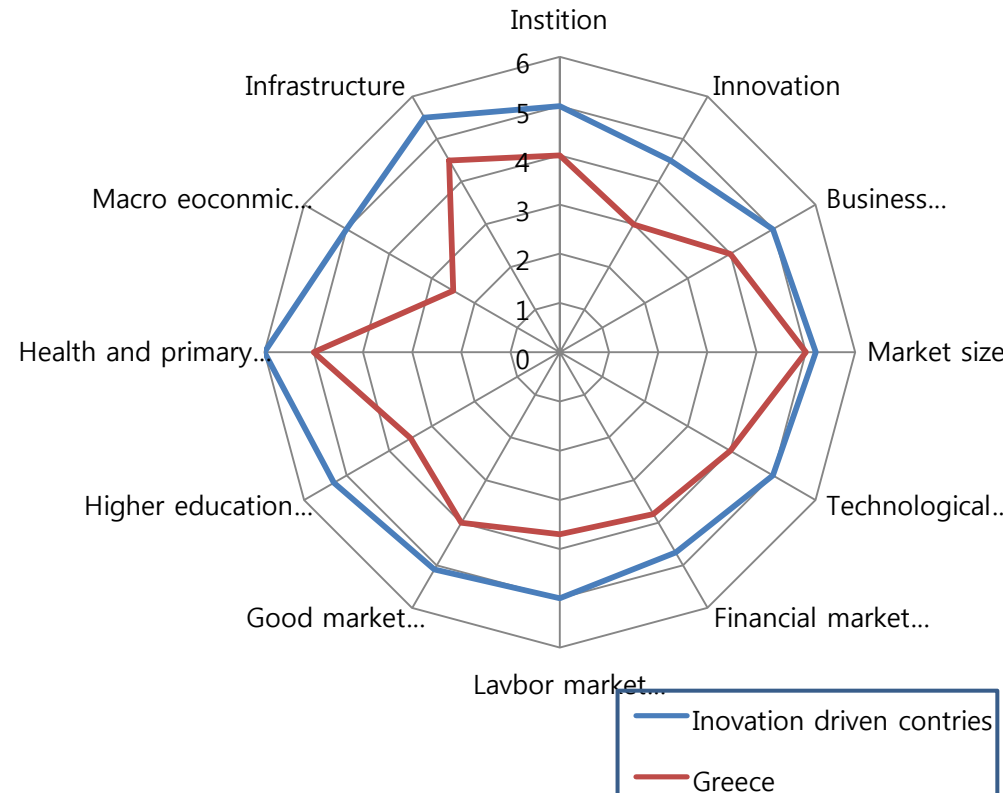
그리스 경제 지표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2010-2011.....	83
Basic requirements	71
1 st pillar : institution.....	67
2 nd pillar : infrastructure.....	67
3 rd pillar : Macroeconomic environment....	123
4 th pillar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0
Efficiency enhancers	59
5 th pilla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42
6 th pillar Goods market efficiency.....	94
7 th pillar Labor market efficiency.....	125
8 th pillar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93
9 th pillar Technological readiness.....	46
10 th pillar Market size.....	39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73
11 th pillar Business sophistication.....	74
12 th pillar Innovation.....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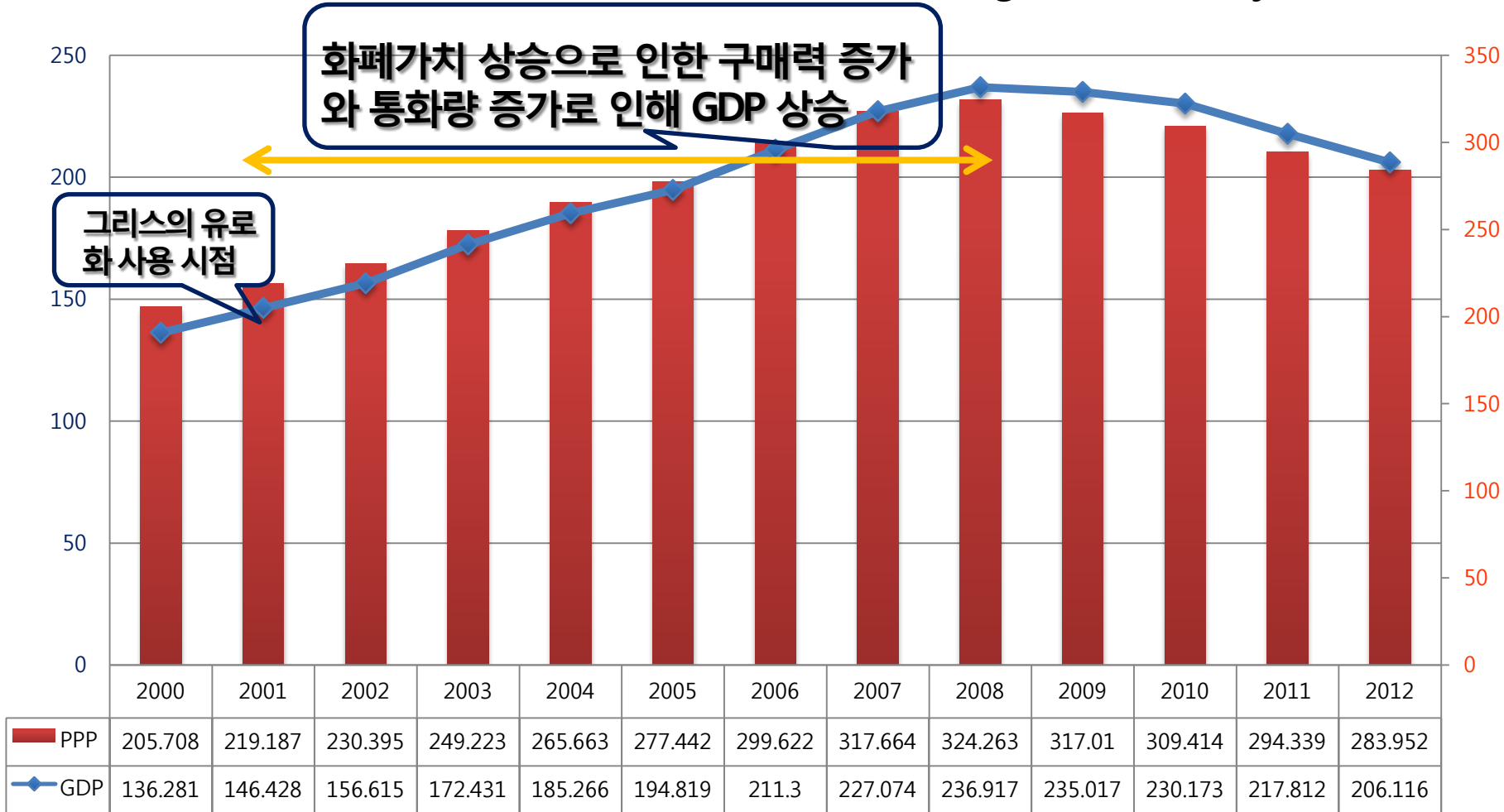
Rank out of 139

Stage of development



그리스 경제 지표

Gross Domestic Product & Purchasing-Power-P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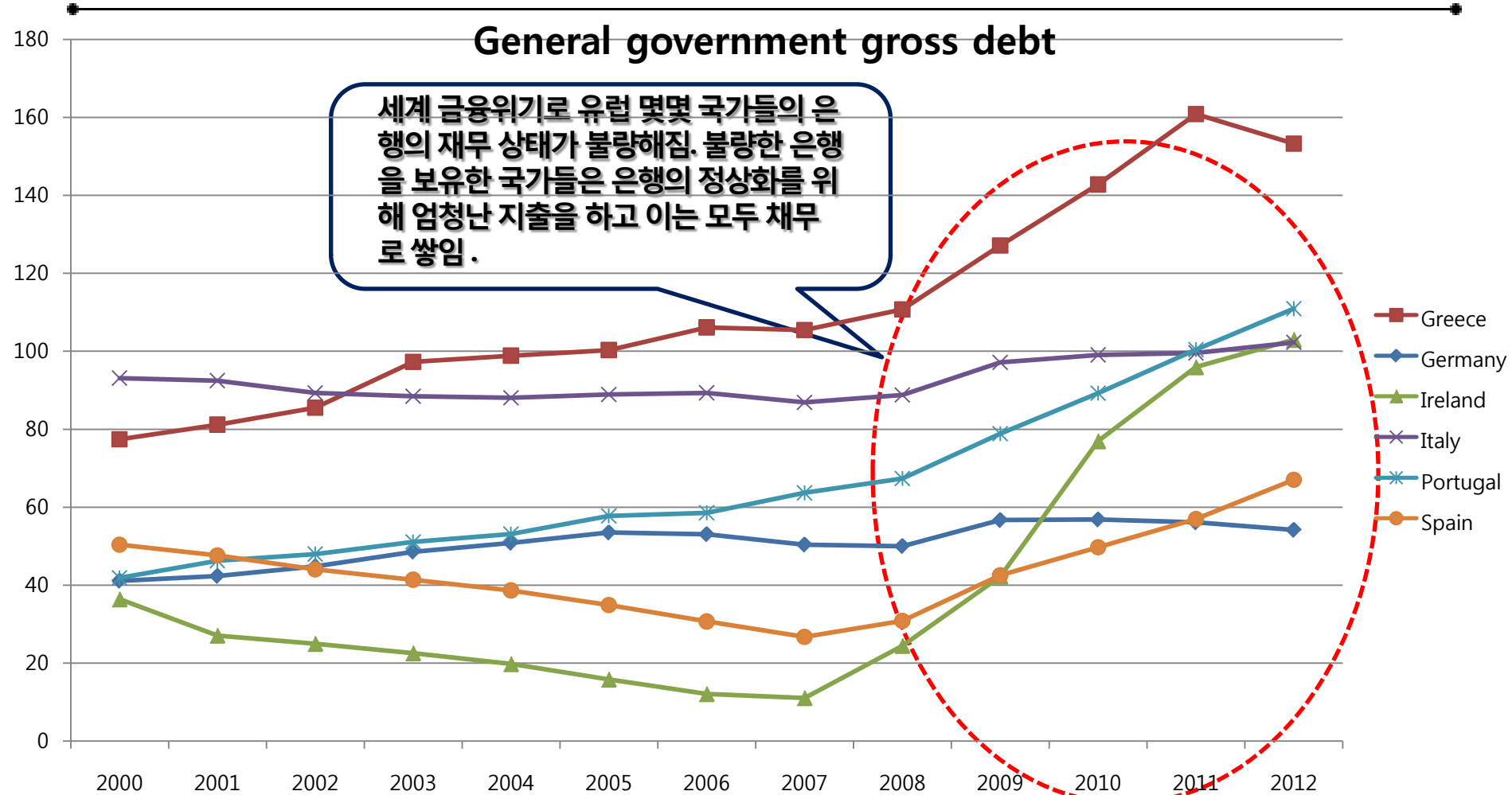


Unit :billions

그리스 경제 지표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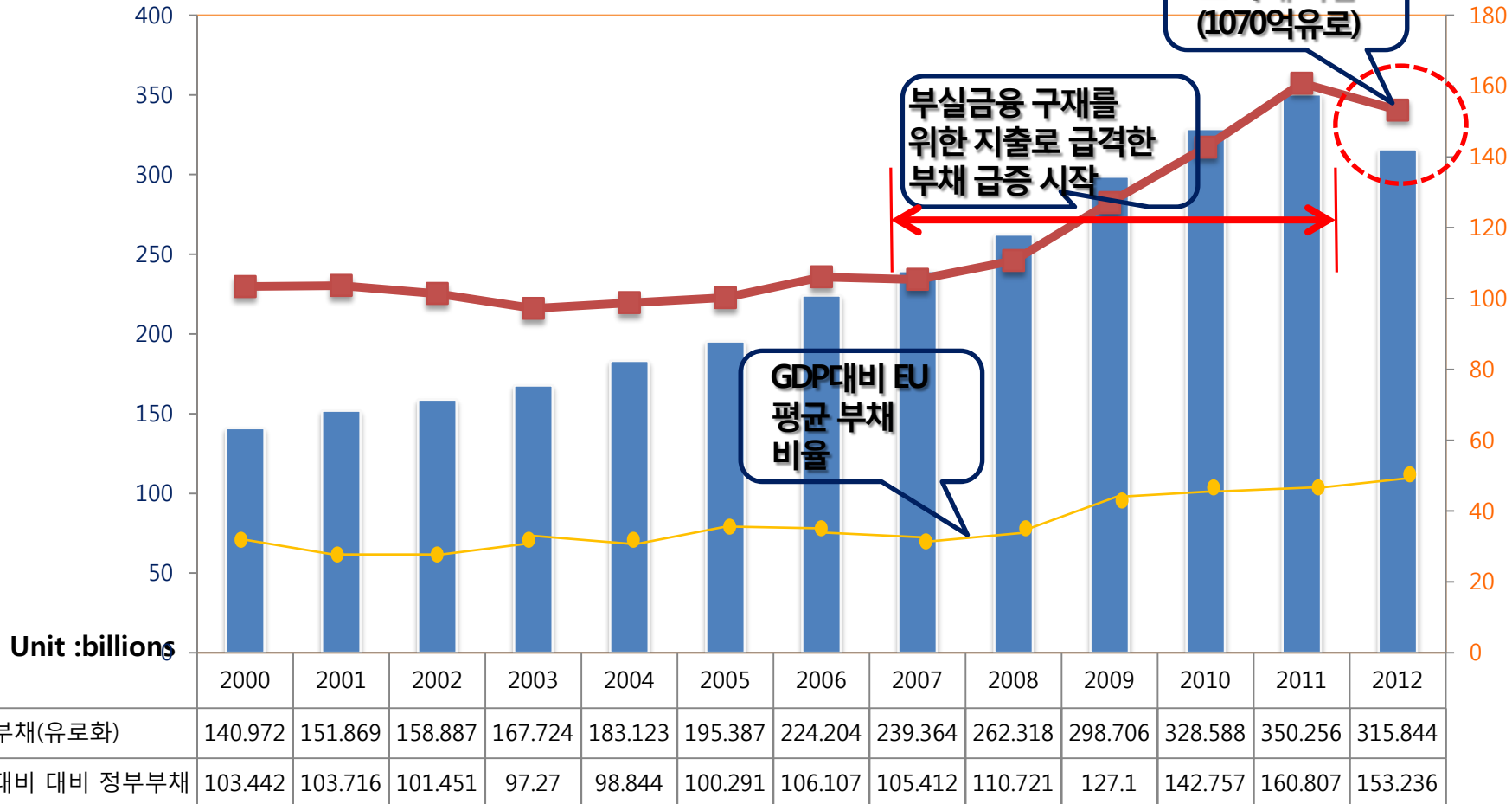
세계 금융위기로 유럽 몇몇 국가들의 은행의 재무 상태가 불량해짐. 불량한 은행을 보유한 국가들은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난 지출을 하고 이는 모두 채무로 쌓임.



Unit: Percent
of potential
GDP

그리스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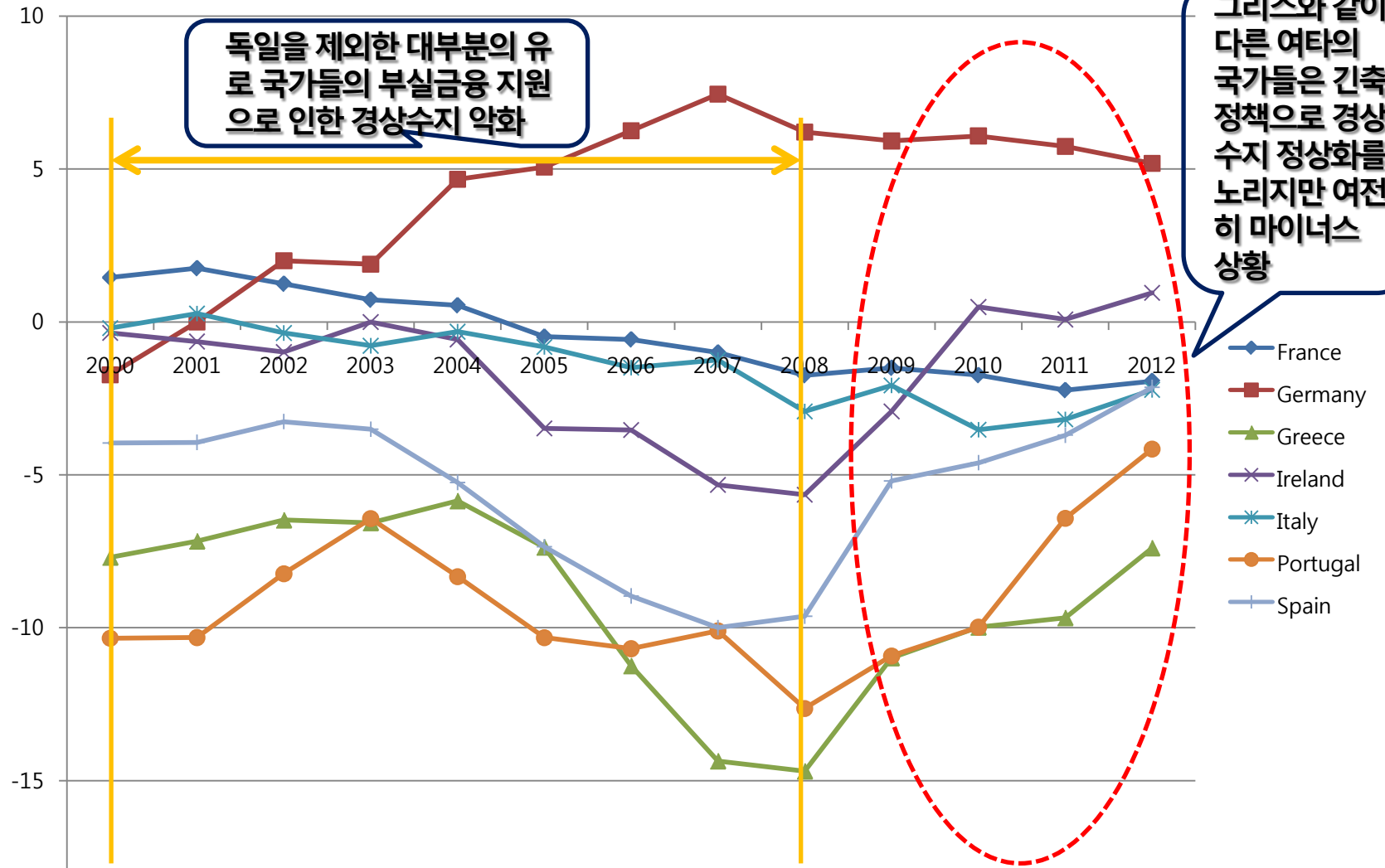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Unit :Percent
of potential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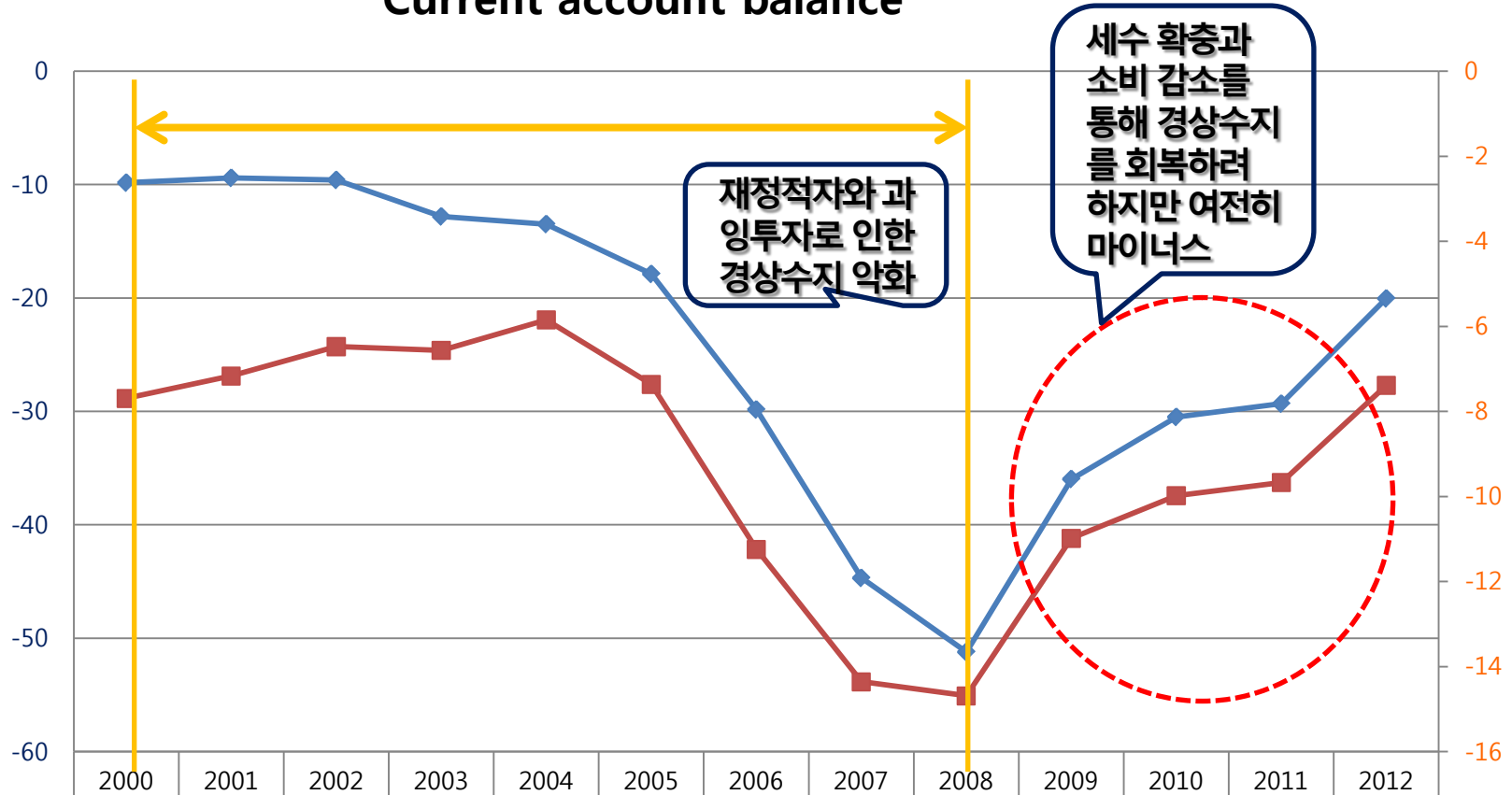
그리스 경제 지표

Current account balance



그리스 경제 지표

Current account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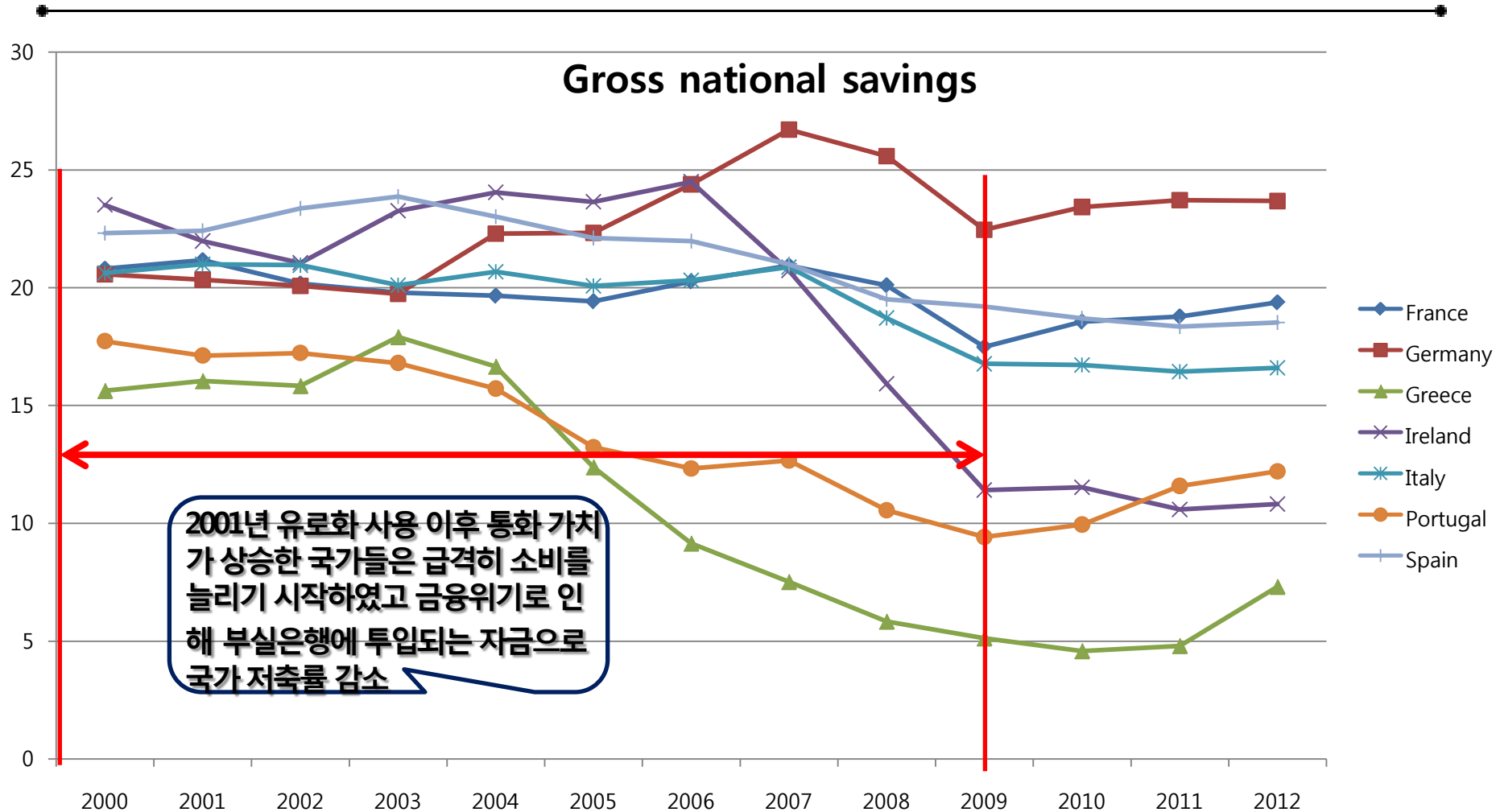


Unit :billion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상수지(dollar)	-9.82	-9.4	-9.582	-12.804	-13.476	-17.874	-29.832	-44.686	-51.212	-35.961	-30.486	-29.317	-20.035
GDP대비 경상수지	-7.695	-7.168	-6.478	-6.566	-5.85	-7.365	-11.244	-14.358	-14.688	-10.986	-9.982	-9.673	-7.39

Unit :Percent
of potential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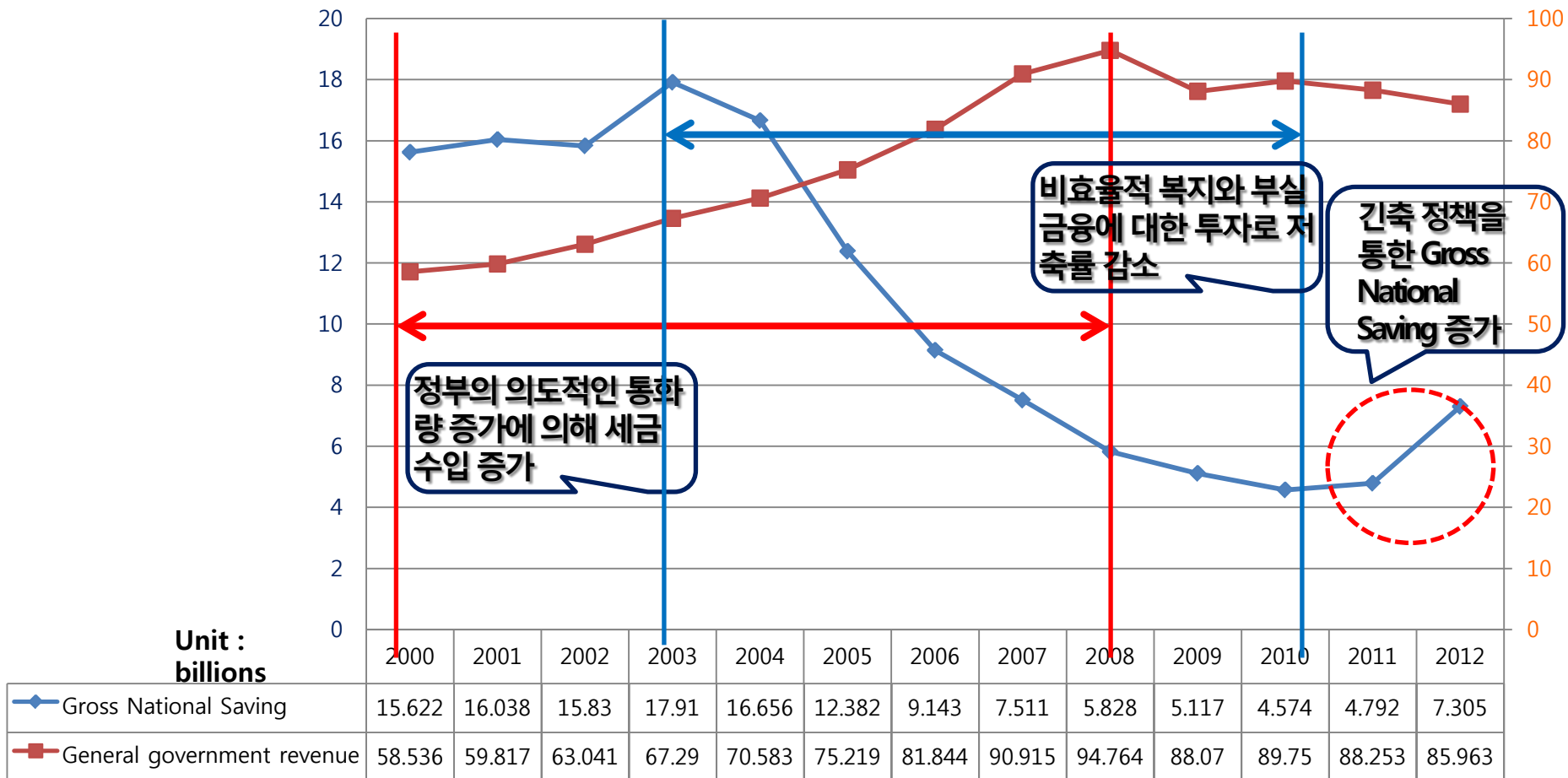
출처 : IMF

그리스 경제 지표



그리스 경제 지표

Gross national savings & General government re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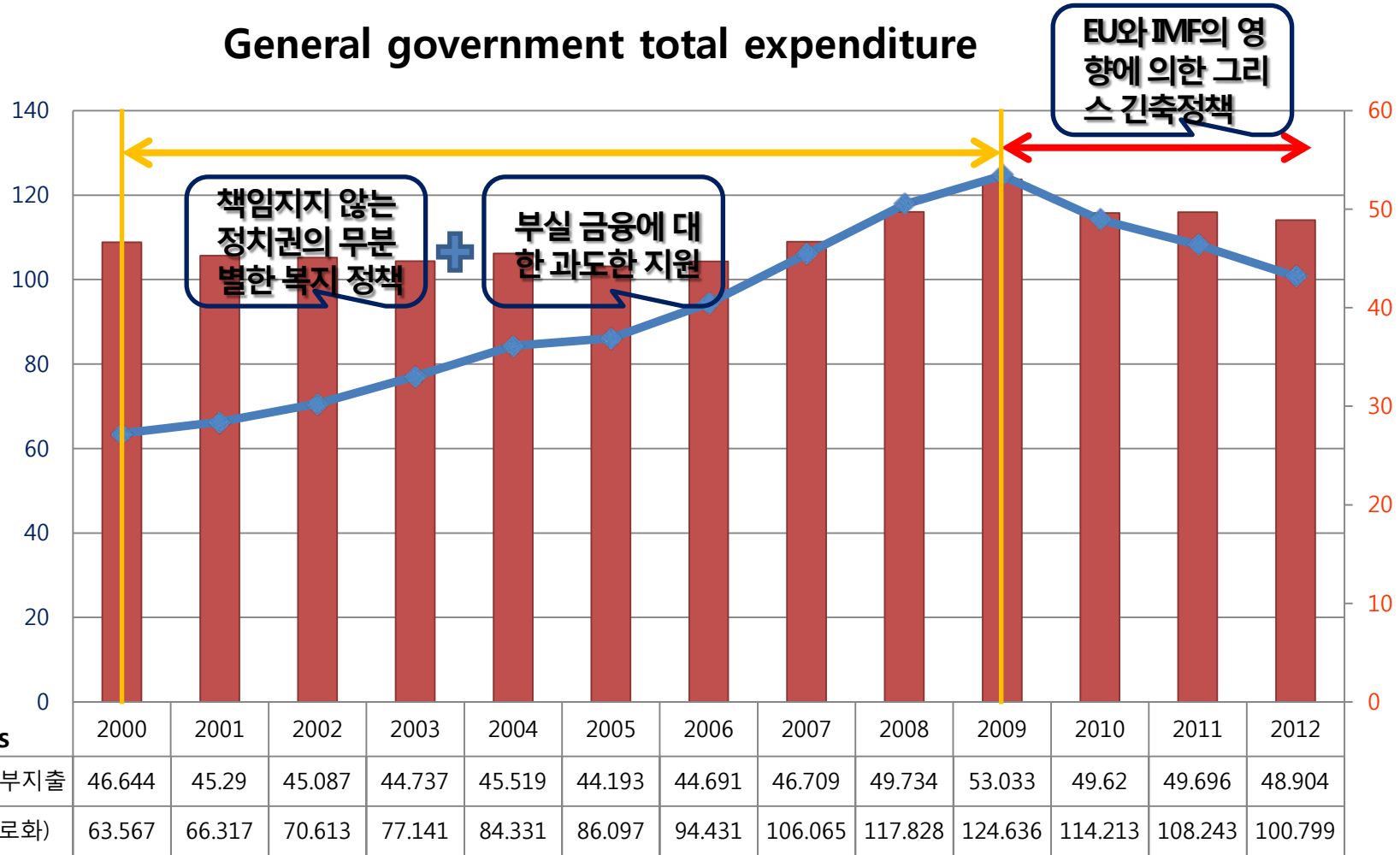


Unit :
billions

출처 : IMF

그리스 경제 지표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Unit :Percent
of potential
GDP

출처 : IMF

3. 그리스 위기의 정치경제적 배경

Modern Greece





"EU, IMF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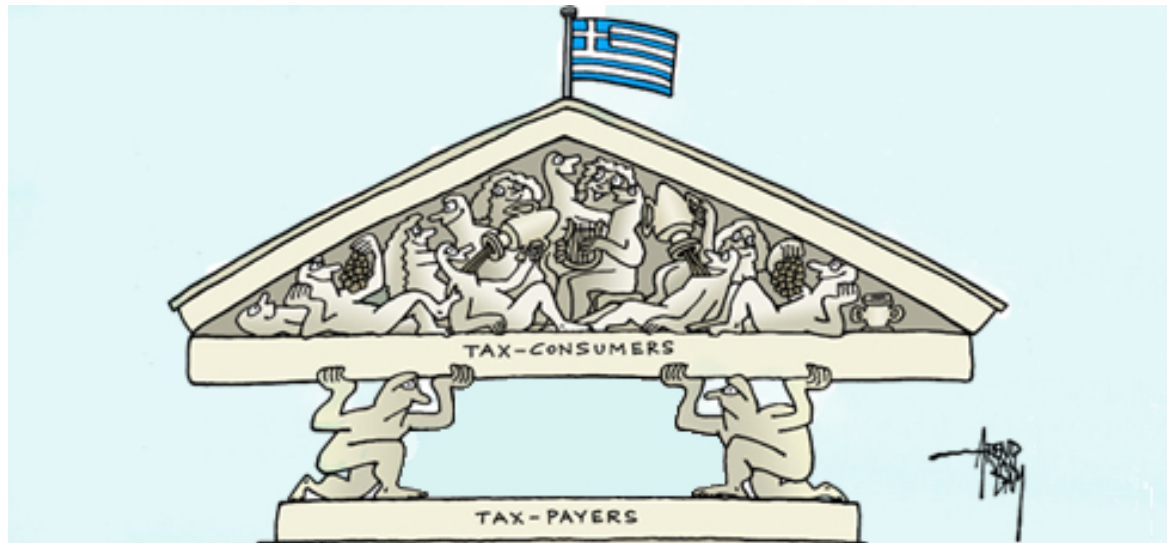
그리스 역사로 읽는 그리스 국민 정서

고대 그리스 = 찬란한 문명의 발상지
현대 그리스 = ?

반자본 / 반기업 /
민족주의 (반서구) 정서

why?

그리스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민성



"그리스는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의 후손이라기 보다는,
비잔티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들의 후손에 가깝다"
- Robert Kaplan (New York Times)

로마와 오스만의 지배

□ 로마 비잔티움 지배기간 (B.C. 2세기~A.D. 1453)

- B.C 2세기경부터 로마제국의 침략을 받아 그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로마 제국 분열(A.D. 395)후에는 비잔티움(동로마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감.

□ 오스만 제국 지배기간 (1453~1830)

- 오스만 제국의 지배 하에서 개종을 거부한 그리스인들은 비잔티움 시대의 농민이나 봉건제하의 농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감수해야 하였으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음
-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 하에 1830년 런던의정서에 의해서야 독립이 보장되고 독립왕국이 수립됨

-
- 그리스인에게 민주적, 자주적 참정권의 기회는 드물었음
 - 서구 유럽이 경험한 정치 변혁 및 경제 산업구조의 변천 과정을 경험하지 못함
 - 오랜 기간 지배를 받아온 그리스인에게 정치와 세금이 지니는 의미는 다른 국가들과의 맥락이 다름
 - 그리스: 오스만 지배에서의 세금
 - 영국: 프랑스 & 나치와의 전쟁을 위한 자발적 수단, 주권 수호역할

그리스 터키 전쟁 (1919~1922)

□ 그리스와 터키는 역사적으로 적대관계

- 역사적으로 양국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있어왔으며, 그리스 높은 국방비 지출의 주원인은 터키 때문이었음

□ 그리스의 터키 원정 실패와 서방 국가

- 그리스의 원정은 서방의 연합국들 특히 영국수상 데이빗 로이드조지가 그리스에게 오스만 제국의 영토 확장을 약속한 것에서 비롯
-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그리스가 획득한 모든 영토 포기, 로잔조약으로 인해 인구 교환을 하는 것으로 끝맺음
 - 1923 전쟁 직후 터키-그리스 사이의 대규모 인구 교환 발생
:120만명 명이 넘는 터키의 그리스 주민이 그리스로 유입
(유출의 2배 →경제 문제 유발)
 - 그리스인들의 서구에 대한 불신으로 남음

제2차 세계대전중의 그리스



□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에 의해 점령된 그리스

- 대기근과 겹쳐 막대한 인명 손실과 그리스 경제 황폐화
-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과 민주연맹(National Democratic League) 등 좌익계열 레지스탕스 운동의 출현
 - 오늘날 그리스 내 대부분 좌파세력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원인

역사적 앙금의 지속: 그리스와 독일의 갈등



**“그들(나치)은 그리스 은행에 있던 금을 빼돌렸다.
그들은 그리스의 돈을 빼돌리고선 반환하지 않았다.”**

- Theodoros Pangalos 그리스 부총리
2010/2



**“그리스는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섬들의
일부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 **Josef Schlarmann, Frank Schaeffler**
독일 기독교 민주당 2010/3



**“독일은 군사력으로 취하지 못한 것을
경제로써 취하려고 한다.”**

- 그리스 여론

그리스 내전 (1946~1949)

□ 그리스 내전의 개요

- 2차 대전 중 좌우익 저항군의 주도권 싸움
 - 그리스 망명 정부가 본국에서 영향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좌익계열 저항세력의 대두
- 그리스 정부군과 공산당 산하 그리스 민주군(DSE)의 대립
 - 독일로부터 해방후, 영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정부군
 -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소련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민주군
 - 영국군의 지원으로 그리스 정부군의 승리, 공산당의 패배 인정
- 2차 그리스 내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정부군의 승리
 - 46년 총선 결과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복, 산악 게릴라 투쟁
 - 트루먼 독트린을 시작으로 그리스 정부에 대한 원조
 - 좌익 세력들은 탄압을 피해 이주

냉전지도와 그리스 내전



그리스 공산당

□ KKE (Communist Party of Greece)

- 1918년 11월 4일에 창설된
가장 오래된 정당
- 2차대전, 그리스 내전 시기에
여러 좌익 계열 게릴라 조직을 지휘
- 성향은 극좌로 분류



군사정권 (1967~1974)

☐ Papadopoulos

-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73년 대통령으로 취임

☐ Ioannides

- 1974년 7월 20일 디미트리오스 요안니디스 장군이 역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가 되었지만 터키가 키프로스 섬을 침공하자 정권은 붕괴

☐ 군사정권 하에서 좌익 세력의 탄압

한국과 비슷한 그리스 역사

1830 그리스,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 (그러나 영국지배로 들어감)
1939~45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점령)
1944~1945 해방 전후1차 그리스 내전 (공산당 저항군vs. 정부군 싸움)
1946~1949 총선 후, 2차 그리스 내전 발발(총선 불복 공산당 게릴라vs. 정부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 승리
이후 그리스내에 철저한 반공분위기 조성되어 후에 군부 쿠데타로 연결
1967~74 군부쿠데타 집권
1974~81 보수파 신민주주의당(ND) 2회 집권
1981~89 사회주의당 "PASOK"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 2회 집권
1989~90 ND-SYN-PASOK 거국내각구성
1993~1995 PASOK승리,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재집권 (1996년 사망)
1995~2004 PASOK
2004~2009 신민당ND집권
2009~현재 PASOK 승리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2011. 11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사임 (후임엔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

최근 20여 년간 사회당 PASOK이 주로 집권해옴

사회당 PASOK의 득세과 장기집권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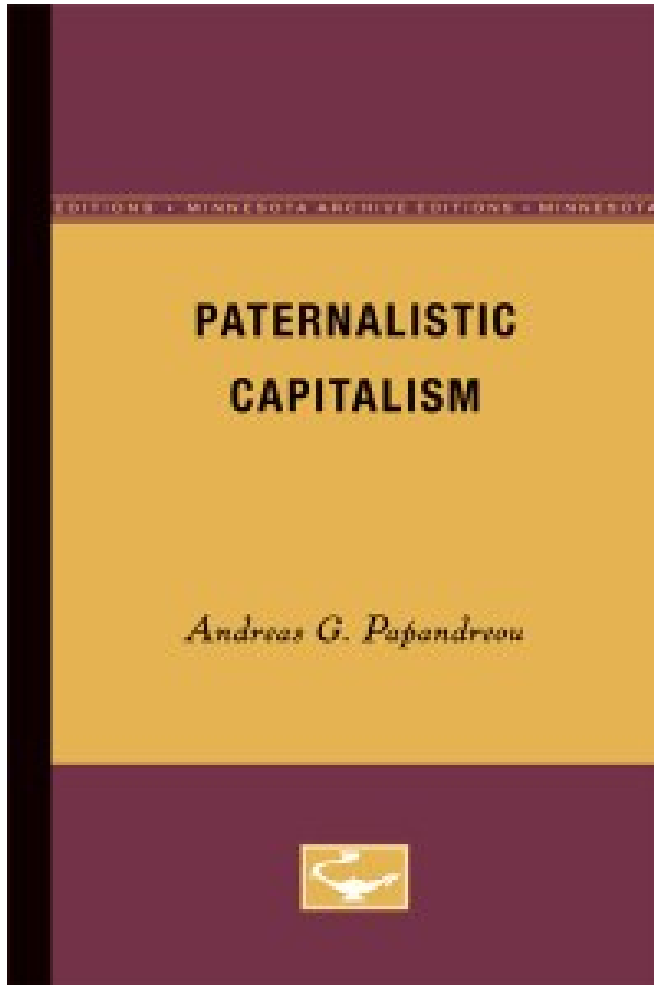
- 군사 독재 정권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가 자유화 계획을 추진하며 메타폴리테프시(민주화 과도기) 촉발
 - 자유화 계획은 아테네 종합기술학교의 대규모 시위로 철회
- 그리스 군사 정권이 몰락한 뒤 1974년 그리스 의회 선거가 열리면서 민주화
- 신민당 총재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가 이끄는 과도 정권인 "국민 통합 정부"가 출범
 - 신민주주의당 창당, 1974년 압도적 지지율로 민정이양 성공
 - 그리스 공산당의 합법화

□ **1981.10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 총재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Andreas Papandreu)는 정권교체에 성공**

- 총 의석 300석중 172석(득표율 48%)을 확보
- 신민당의 7년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권태감과 고물가, 고실업률 등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시책의 실패
- 프랑스 사회당정권 등장에 따른 심리적 영향

□ **사회당 정부는 선거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식 개혁을 추진**

- 그리스 정교회의 시민생활 간섭 축소
-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 보편적 연금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
- 임금의 인플레이 연동제 등을 채택, 공공부문 인력 확충



1974년 , 사회당(PASOK) 창당
1981년 집권

파판드레우의 저서
"Paternalistic Capitalism (1972)"

□ **사회당 정부의 정책이 잇따른 실패로 드러나자,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

- 선거공약 사업이었던 EC 및 NATO 탈퇴, 그리스 주둔 미군기지 철수 등을 불이행
- 인플레이와 실업의 증가, 국제수지 적자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 1984.6 구주의회 선거에서 신민당이 사회당 득표율에 근접함

□ **1985년 사회당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조기총선을 실시기로 결정하여, 신민당을 누름**

- 1985.5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선출을 3월로 앞당겨 실시
- 1985.10로 예정된 총선을 동년 6월에 실시함으로써 총 의석 300석중 161석을 확보하여 재집권, 단독 내각을 재구성
- 1986.3 수상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집권 제2기(1985~89) 정치권력 기반을 강화함

□ 1993년 이후로 사회당이 3회 연속 재집권에 성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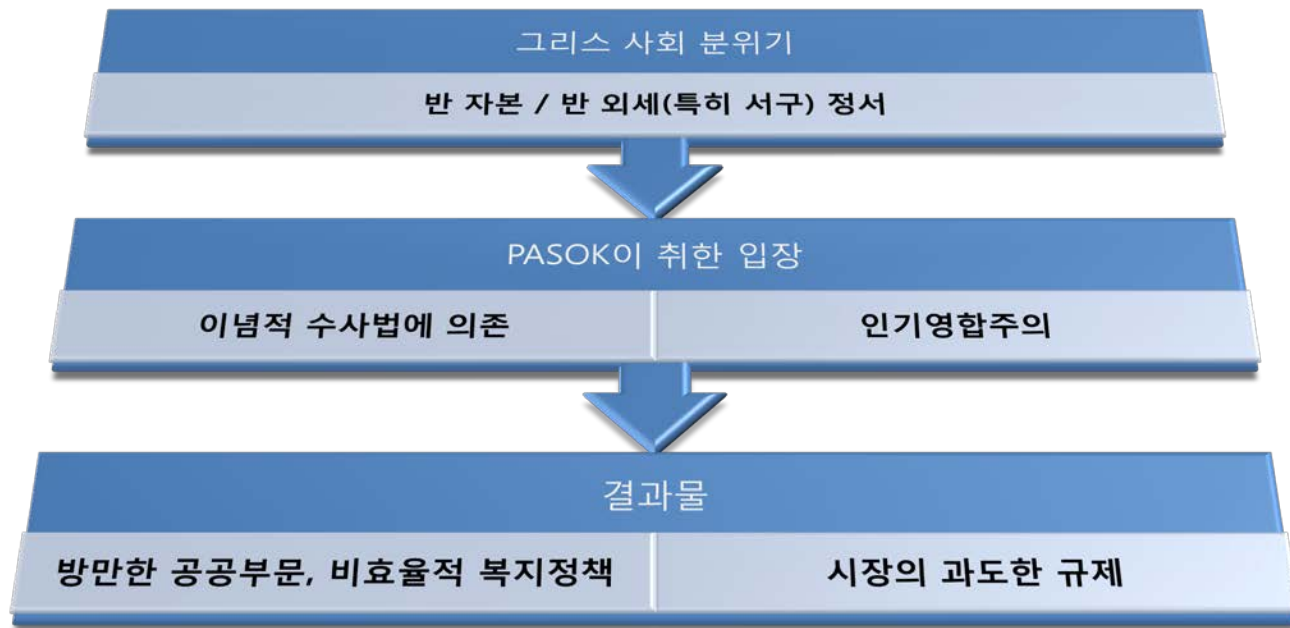
- 1993.10 총선결과, 사회당이 49%의 지지율로 재집권함
- Papandreou 총리가 건강 악화로 1996.1 사임하자 Konstantin Simitis가 총리직을 승계함
- 사회당(PASOK)은 1996.9 조기총선에서 41%의 지지율을 확보하여 재집권
- 2000.4 조기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이 3회 연속 재집권에 성공함

-
- **2009년~2011년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아들)의 사회당이 신민당을 누르고 집권**
 - 부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에 이어 3대째 총리

 - **막대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임금과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는 등 긴축정책을 추진**
 - 과거 사회당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를 지지했던 이들로부터 비난 쇄도
 - 그는"총리직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가 만든 부패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메스를 가하겠다"고 밝힘

 - **"지금의 긴축정책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배반이다.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그는 공약으로 사회 복지 증진과 임금 인상을 내세웠다. 그런데 고작 2개월만에 모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 그리스의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콘스탄티노스 쿠소디모스
(2012.4.4 아테네, 머니투데이)

사회당(PASOK)의 행보



□ 1980년대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추구하는 포퓰리즘(populism)과 유권자의 지지를 대가로 뒤를 봐주는 '정치적 후견주의'(political clientelism)가 이 시기에 정당을 기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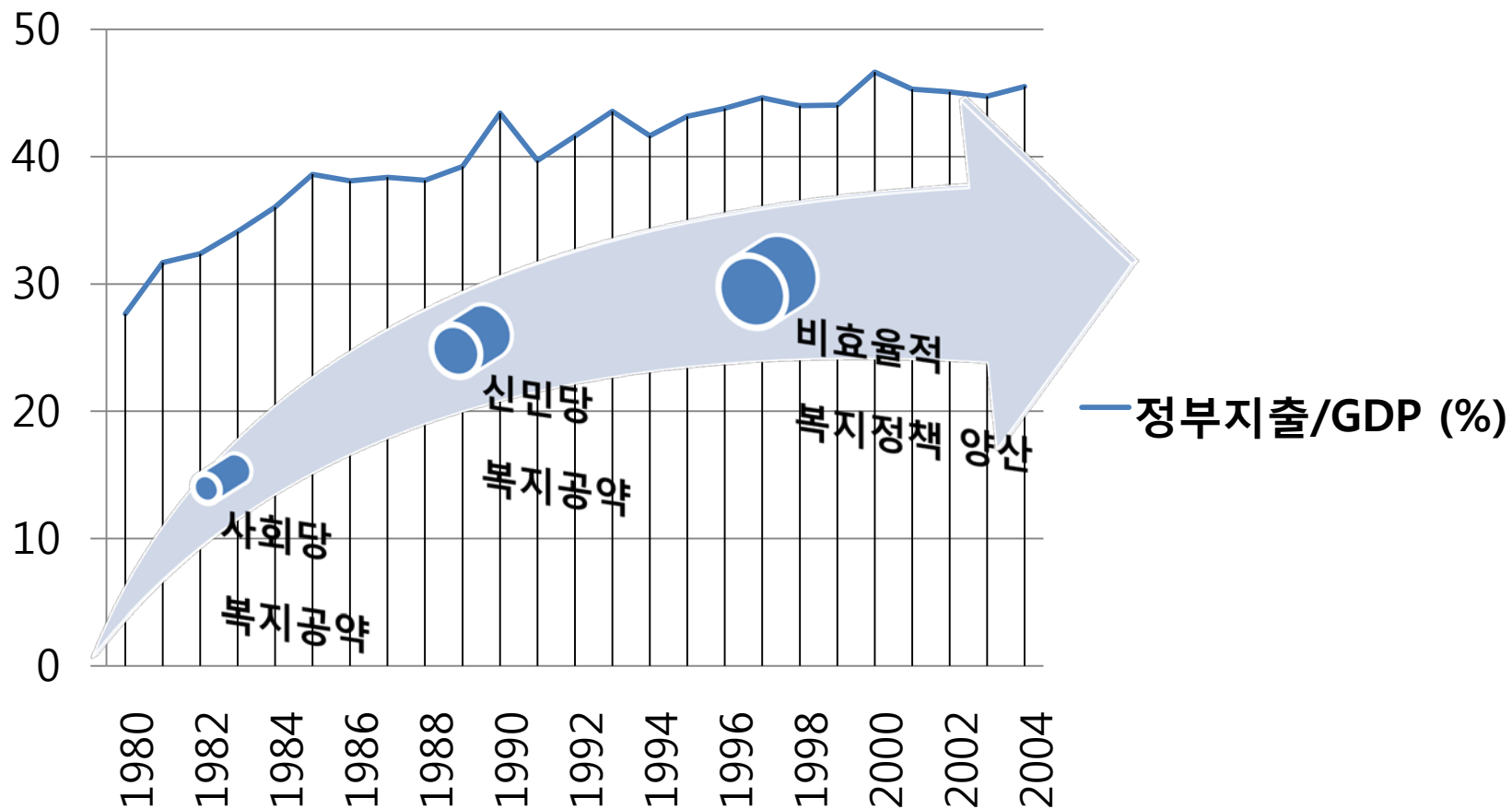
- 특히 좌파 사회당과 우파 신민주당은 표를 얻기 위해 청탁용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경쟁적으로 늘렸음

□ 1981년 사회당 정부 시절부터 공공부문의 규모 확대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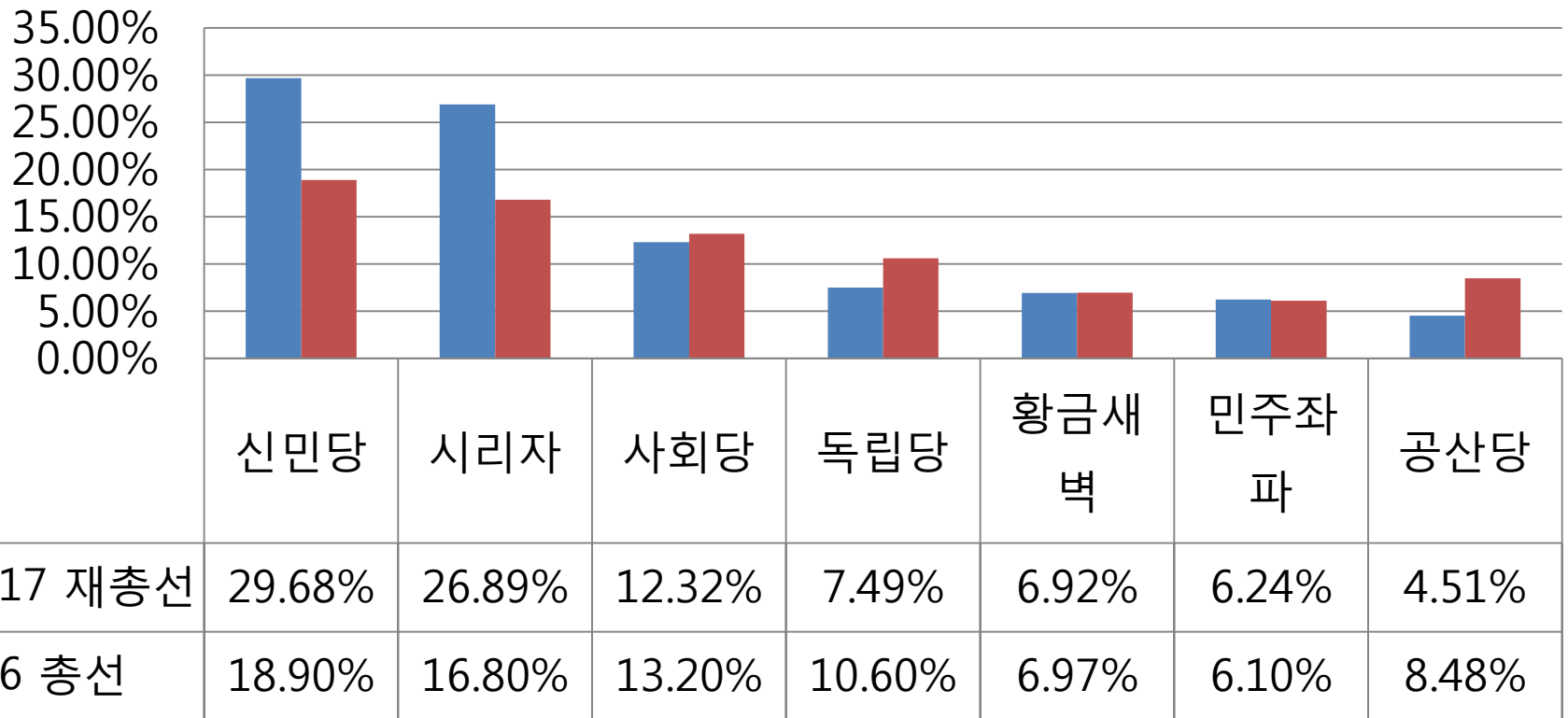
- "사회당은 정부 규모를 키웠을 뿐 아니라 대학, 병원, 연구소 등 새로운 공공기관도 만들었는데 경제적·기능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가 목적이었다" - 크리스토스 라 이린치스 아테네대학 교수
- 국가 재원으로 공공부문에 지지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며, 민간기업들도 사업면허를 따내고 은행권 대출을 보장받기 위해 정당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음

□ 포퓰리즘과 후견주의는 1990년대 초 정권이 우파인 신민당으로 잠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았음

- "1993년 사회당이 재집권했을 때 후견주의 원조인 사회당마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스의 후견주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마케도니아대학의 타키스 파파스 교수



2012. 6. 17. 그리스 총선 결과



이념성향

중도우파 급진좌파 중도좌파 보수우파 극우 급진좌파 공산주의

구제 금융/ 유로존

Pro-구제 금융 Anti-구제 금융 Pro-구제 금융 Anti-구제 금융 EU, 유로존 탈퇴 Anti-구제 금융 EU, 유로존 탈퇴

최근 그리스 총선 결과와 평가

□ 5.6 총선에 비해 신민당과 시리자에 표가 쏠리는 현상

- 유로 or 탈유로가 이슈화 되면서 진영논리가 작용

□ 신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대두

- 그리스 최대 정당이었던 사회당(PASOK)은 제3당으로 전락
- 신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긴축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총선의 쟁점

- 구제금융협약에 따른 긴축안 찬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
- 신민당과 시리자 간 정치적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 투표 성격을 갖게 됨

□ 결과에 대한 평가

- 그리스 국민들이 선택한 '안정'
 - 시리자: 재정위기를 초래한 과거 양대 정당에 대한 심판과 국민들의 반서구, 반긴축 정서를 공략
 - 신민당: 시리자의 구제금융협약 무효는 유로존 탈퇴를 말하며 '유로나 드라크마냐'의 양자 택일식 캠페인을 전개
 -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급부상한 시리자는 유로존 잔류와 구제금융협약 무효화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공약, 과격한 정책성에 대한 우려로 한계가 드러남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되며, 국제금융시장 역시 '안정'
 - 5.6 총선에서 시리자의 집권가능성이 부각되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부상
 - 선거에 승리한 신민당은 유로존 잔류와 함께 협약과 긴축조치를 수용하는 친 유로의 입장으로 유로존 국가와 금융시장의 환영을 받음

1. 포퓰리즘
2. 취약한 산업경쟁력
3. 부정부패
4. 기타 과도한 지출

III. 그리스 위기를 초래한 그리스 내부 문제점 분석

(주재민)



1. 포폴리즘

3.1 포퓰리즘

□ 정치적 배경과 흐름

-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대변되는 양당 구조



Andreas
Papandreou(1919-1996)



사회당
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 경제발전(공기업 민영화)
- 사회보장제도 강화
- EU 통합 참여
- 방위력 증강

Konstantinos
Karamanlis(1907-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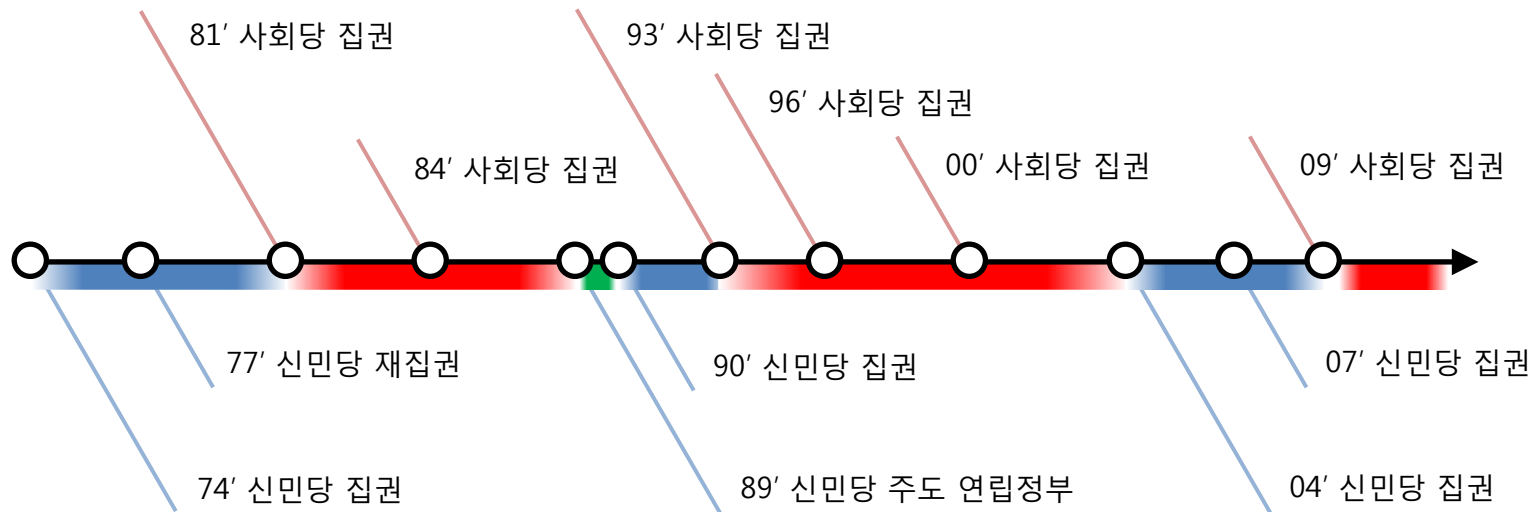
신민당
ND
(New Democracy Party)

- 자유시장 경제주의
- 국가안보역량 강화
- 친 서방 정책
- 키프러스 지지



3.1 포퓰리즘

□ 정치적 배경과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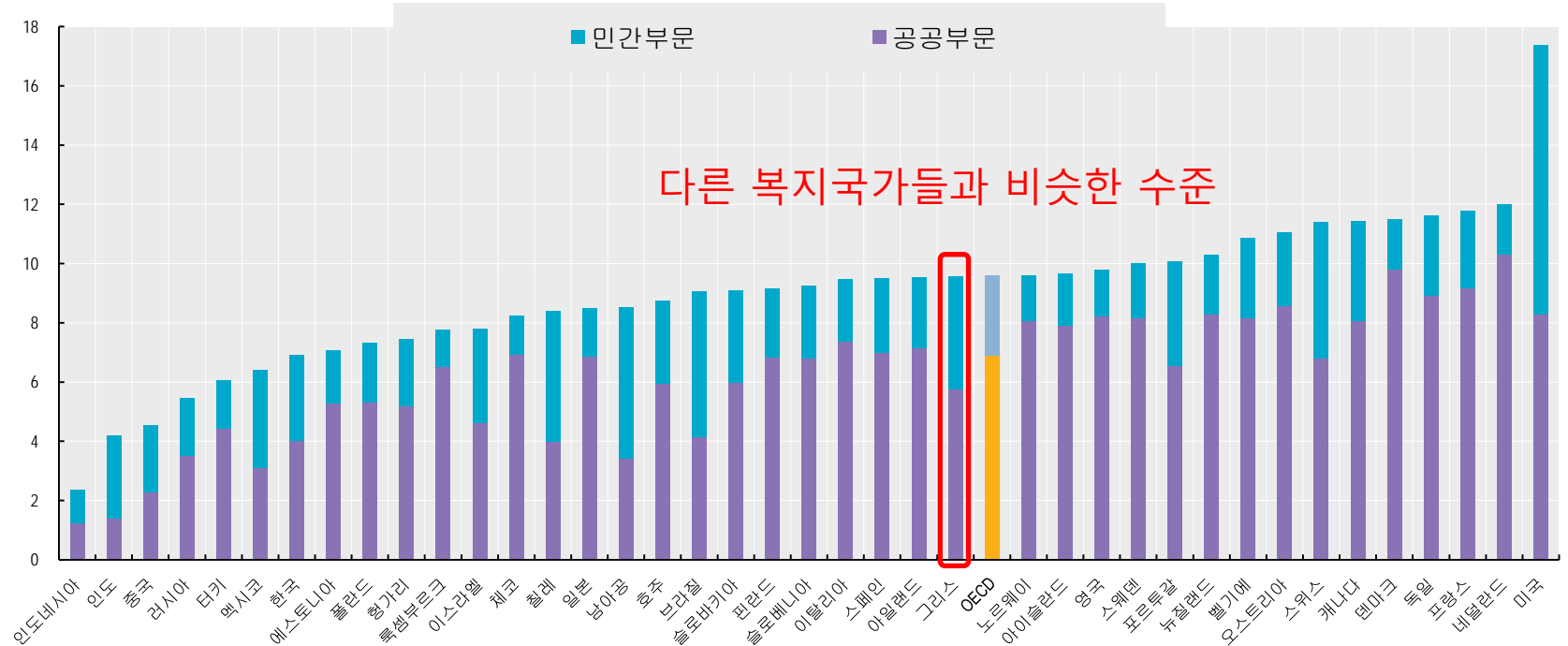


- 74년 이후로 정권 교체가 지속되며 각 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 공약 등을 제시함
- 선심성 정책이나 공약은 결국 복지에 대한 과다 지출로 이어져 재정적자를 야기함
-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료복지, 연금 제도, 공공부문 확대를 꼽을 수 있음

3.1 포퓰리즘

□ 의료 복지

국가별 GDP 대비 의료복지 정부예산 비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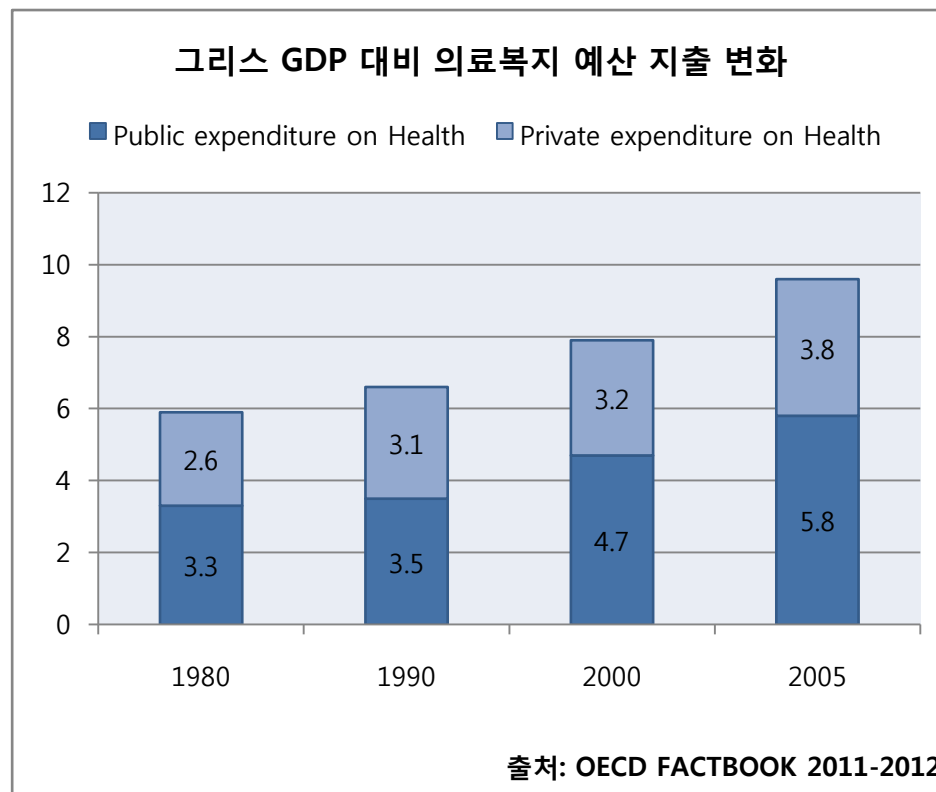


출처: OECD FACTBOOK 2011-2012

3.1 포퓰리즘

□ 의료 복지

- 그리스의 GDP 대비 건강부문 정부 예산 지출 현황
 - 그러나 현재 OECD국가 내 다른 복지국가들과는 비슷한 수준
 - 내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의료복지의 무분별한 확대와 비효율성



3.1 포폴리즘

□ 의료 복지

-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06 Social Budget에 따르면 6개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시스템이 관리되며 다수의 Insurance Unit에 의해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감

부서	관리 내용
고용부, 사회안전부	사회보험서비스의 조직과 관리(96개 대리점)
건강부, 사회연대	보건소 및 병원, 아동과 노인, 지역 건강보험서비스까지 관리
국방부	군인과 부양가족의 건강보험을 맡는 10개 보험사 관리
농림부	지역주민의 건강보험 제공
상선부	선원과 부양가족의 7개 보험 정책 관리
재무부	위 모든 서비스의 재정 관리

이 외에도 56개의 질병 기금과 연금 기금이 추가적
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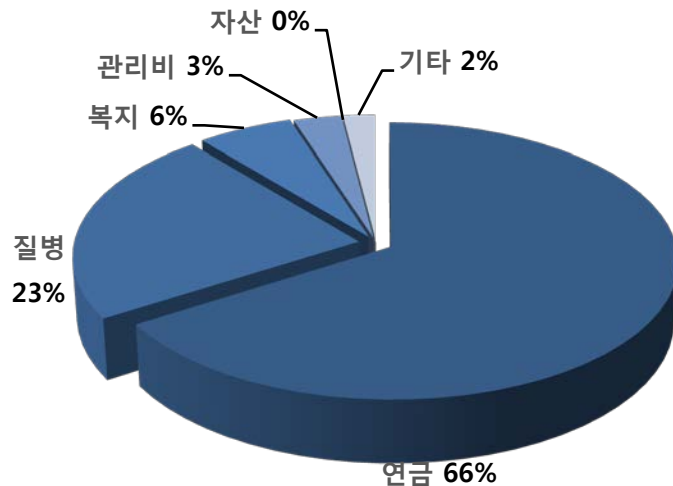
Insurance Unit	지급 대상
I.K.A	블루, 화이트칼라 근로 자와 도시인구
O.G.A	지방 거주 인구
T.E.V.E. TAE	소상공인과 제조상인
Civil Servants	
O.T.E	통신사 근로자
D.E.H	전력회사 근로자
Banks' Insurance Units	은행 근로자

3.1 포퓰리즘

□ 연금 제도

- 그리스의 연금제도는 EU 국가 중 가장 후한 편에 속함
 - 연금으로 평균 임금의 95% 수준을 지급받음
 - 연금 만기 기간도 타국과 비교했을 때 5년 정도 짧은 편임
 - 그리스는 EU 가입국의 사회지출 부문 연금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임

2006년 사회지출 구성 비율



OECD 주요국 공적연금 산정내용

국가	연금/임금 비율	법정 정년	최대 연금 기여기간	연금산정 근무기간
그리스	95.1	65	35	퇴직 전 5년
스페인	75.6	65	35	최대 15년
이태리	67.7	65(60)		전체 근무기간
프랑스	50.1	60	40	최대 25년
미국	40.2	67	35	최대 35년
독일	36.9	65		전체 근무기간
영국	30	65	44	전체 근무기간

출처: Greece OECD Economic Surveys(2009.7)

3.1 포폴리즘

□ 연금 제도

- 연금수령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인 정년은 65세
 - 최소 연금기여기간은 4,500일(15년에 해당하는 수치)
 - 최대 연금기여기간은 11,100일(37년)
 - 중노동직, 비위생직, 자녀나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여성의 경우 허용됨



11,100일(37년)의 근로활동

=



Full Benefit

3.1 포퓰리즘

□ 연금 제도

퇴직연령과 연금 수준		
	평균 퇴직 연령	연금 수준
그리스	58세	95.70%
OECD 평균	63.2세	60.80%

출처: OECD

- 기준을 넘어서는 연금 수령이 만연함
 - 600여 종류의 중노동직



- 2011년 연금 부정실태 조사에서 20만 명이 넘는 연금 불법수령자를 적발함
- 2001년 인구조사에서 10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700여명이 채 안됐지만, 2011년 IKA에서 연금을 수령 받은 고령인구는 9,000명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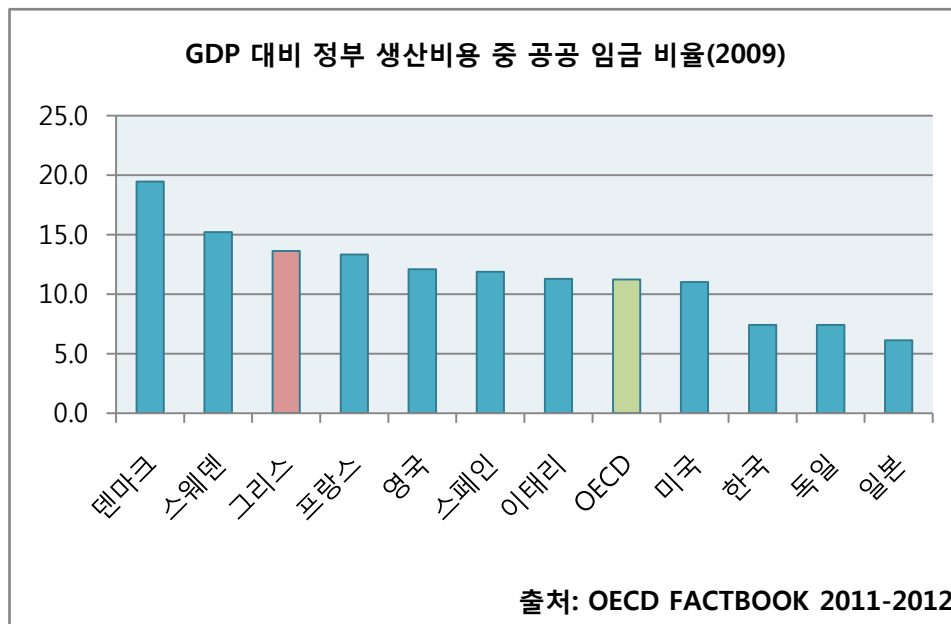
3.1 포퓰리즘

□ 공공부문의 확대

-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공부문 임금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많아짐
 - 2008년 공공부문 근로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8% 규모
 - 1995~2008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
 -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의 임금은 2배 가까운 수준
 - 정부 생산비용 지출 중 공공 임금 비율은 GDP 대비 13.6%로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함

국가별 공공 민간부문 임금 비교(단위: 유로)			
국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Δ%
핀란드	2406.19	2657.15	-9.44%
스웨덴	2702.51	2964.6	-8.84%
네덜란드	2422.84	2633.04	-7.98%
덴마크	3154.57	3334.87	-5.41%
아이슬란드	3324.9	3345.45	-0.61%
EU 27	2261.88	2210.42	2.33%
영국	3378.36	3254.23	3.81%
노르웨이	4097.03	3888.27	5.37%
독일	3125.81	2708.94	15.39%
스페인	2165.52	1641.92	31.89%
그리스	2136.41	1473.15	45.02%
터키	1028.72	596.54	72.45%
포르투갈	1848.63	1015.5	82.04%

출처: EUROSTAT



3.1 포퓰리즘

□ 공공부문의 확대

- 사회당(PASOK)과 신민당(ND) 모두 공공부문 노조와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음
 - 비정상적인 과대채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 전년대비 임금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증가
 - 아테네 뉴스의 칼럼니스트인 Mark Dragournis는 2%의 공무원만이 애국심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수행하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받는 임금보다 27% 낮은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힘
- 결국 포퓰리즘으로 확대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 적자를 야기함

2. 취약한 산업경쟁력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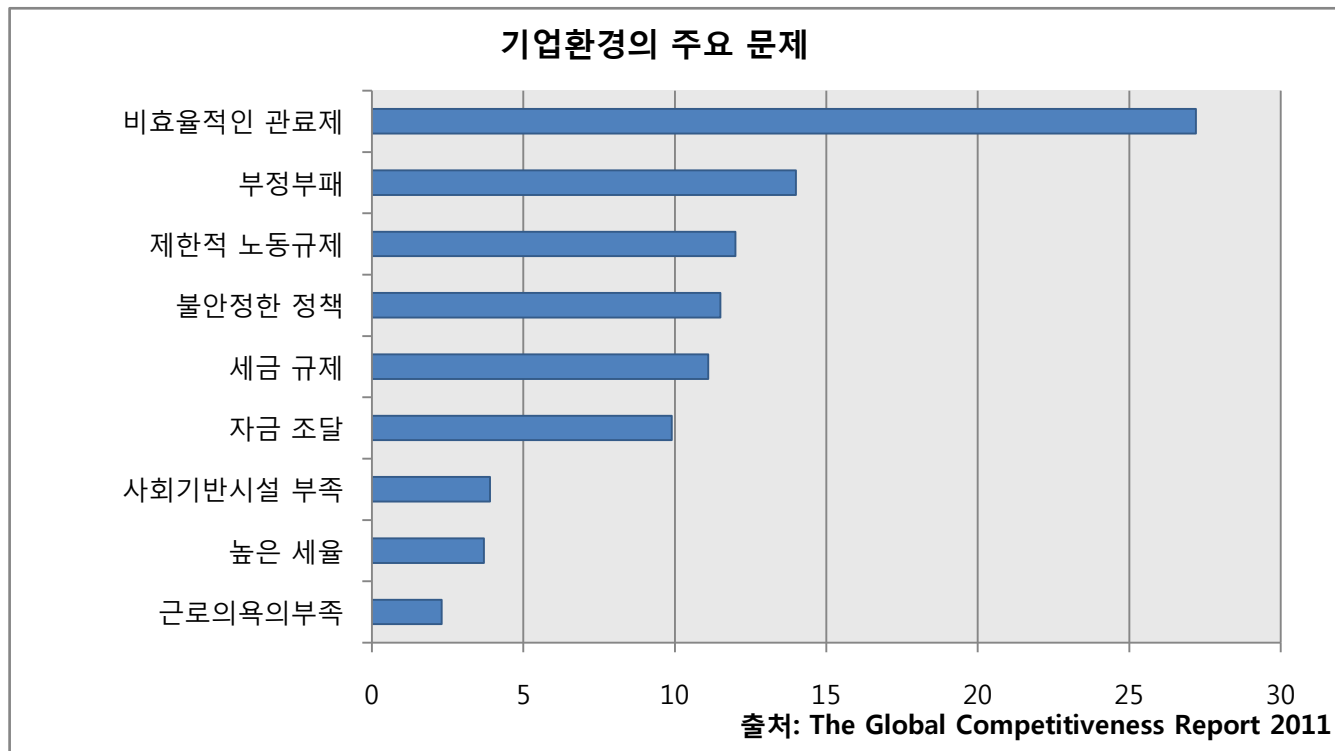
□ 그리스의 적대적인 기업 환경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2에 따르면 그리스의 기업 환경은 세계 100위
 - 또한 EU 27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 (The Europe 2020 Competitiveness Report)
- 그리스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71개국 중 34위를 차지 (GEDI, 2010)
 - 이는 말레이시아, 라트비아,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보다 뒤쳐진 순위
- 노동, 자본의 이동성 부족과 함께 자유허쟁의 기업과 개인의 부의 창출에 있어 불리한 환경을 의미
- 지난 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축소와 정부부처를 연결한 인터넷 플랫폼 형성 등의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환경은 열악한 상태
- 이렇게 열악한 기업환경은 복잡하고 과도한 관료주의적 절차와 제도, 취약한 투자 인센티브,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산업기반 부족, 공무원 선호하는 국민성 등에서 기인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 그리스의 적대적인 기업 환경

- 이렇게 열악한 기업환경은 복잡하고 과도한 관료주의적 절차와 제도, 취약한 투자 인센티브,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산업기반 부족, 공무원 선호하는 국민성 등에서 기인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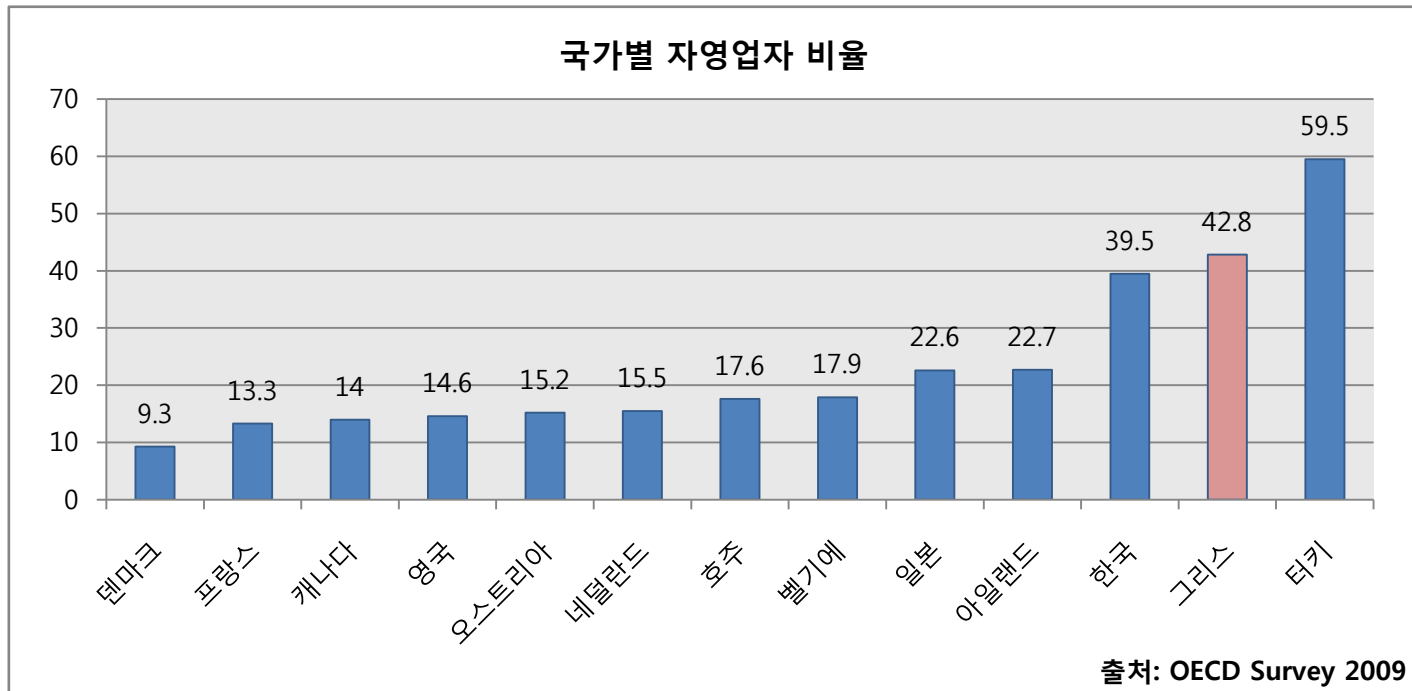
□ 복잡한 규제와 절차

- 신규 기업 창업 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는 그리스 산업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
 - 관료주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극심한 상태로, 신규 기업체를 설립하려면 총 15 단계의 절차, 평균 소요기간 19일, 그리스 1인당 소득의 11%의 비용을 거쳐야 함(Greece's 'Odious' debt(2011))
 - 이는 주변 국들의 6.2 단계, 13.4일, 1인당 소득의 7% 비용과 매우 대조적
- 특히 제조업 기업의 허가단계는 더 오래 소요됨
 - 설립에 2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며, 설립 뿐만 아니라 확장, 기업 현대화,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또 하나의 원인
 - 환경허가, 건축 허가는 특히 허가 발행에 전문화된 인력 부족과 권한이 중첩되는 정부 부처 때문
 - 이는 그리스에서 소규모 기업 발달에 기여한 원인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 복잡한 규제와 절차

- 전통적으로 약한 제조업 기반에 규제까지 더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짐
 - 맥킨지는 "그리스 제조업체의 약 3분의1은 10명 이하의 영세업체인데 독일은 4.3%에 불과하다" 라고 언급했고 이는 작은 기업일수록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나타난 구조라고 지적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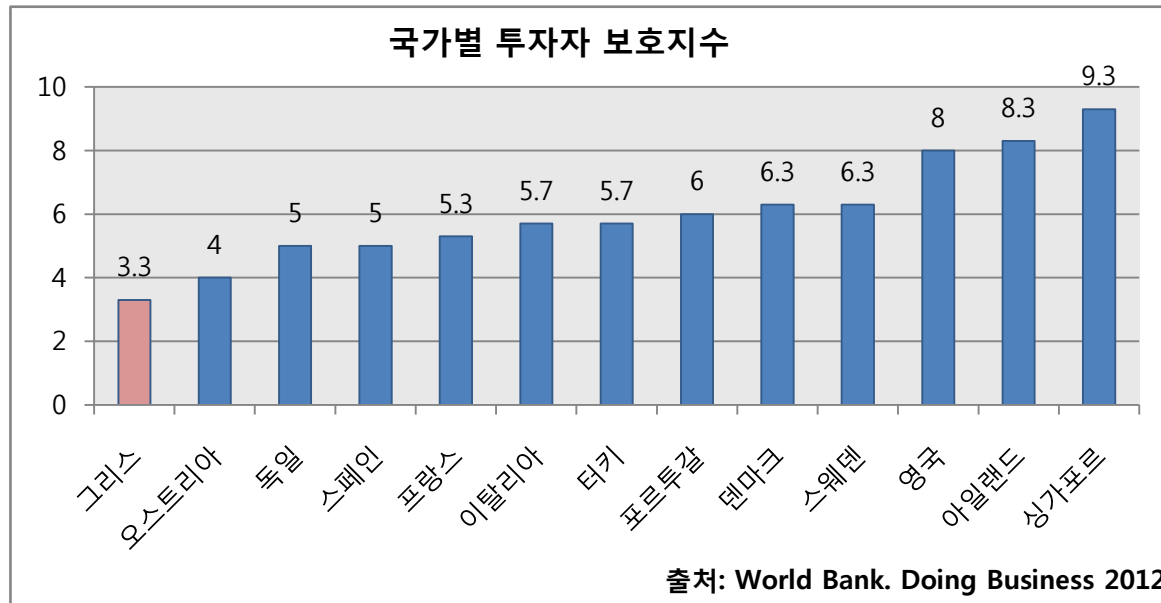
□ 취약한 투자자 보호와 투자 문제점

- 그리스는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영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 EU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존재
-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 및 EMU가입 전후 그리스 정부의 노력으로 인플레이션, 이자율, 주식시장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해옴
 - 또한 주요 지역, 산업별 분류에 따라 외국인 투자 세제감면,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등 다양함
- 그러나 취약한 투자자 보호와 투자 관련 문제점들은 장애물로 작용
 -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 중이나 아직 절대적 투자금액은 미미한 수준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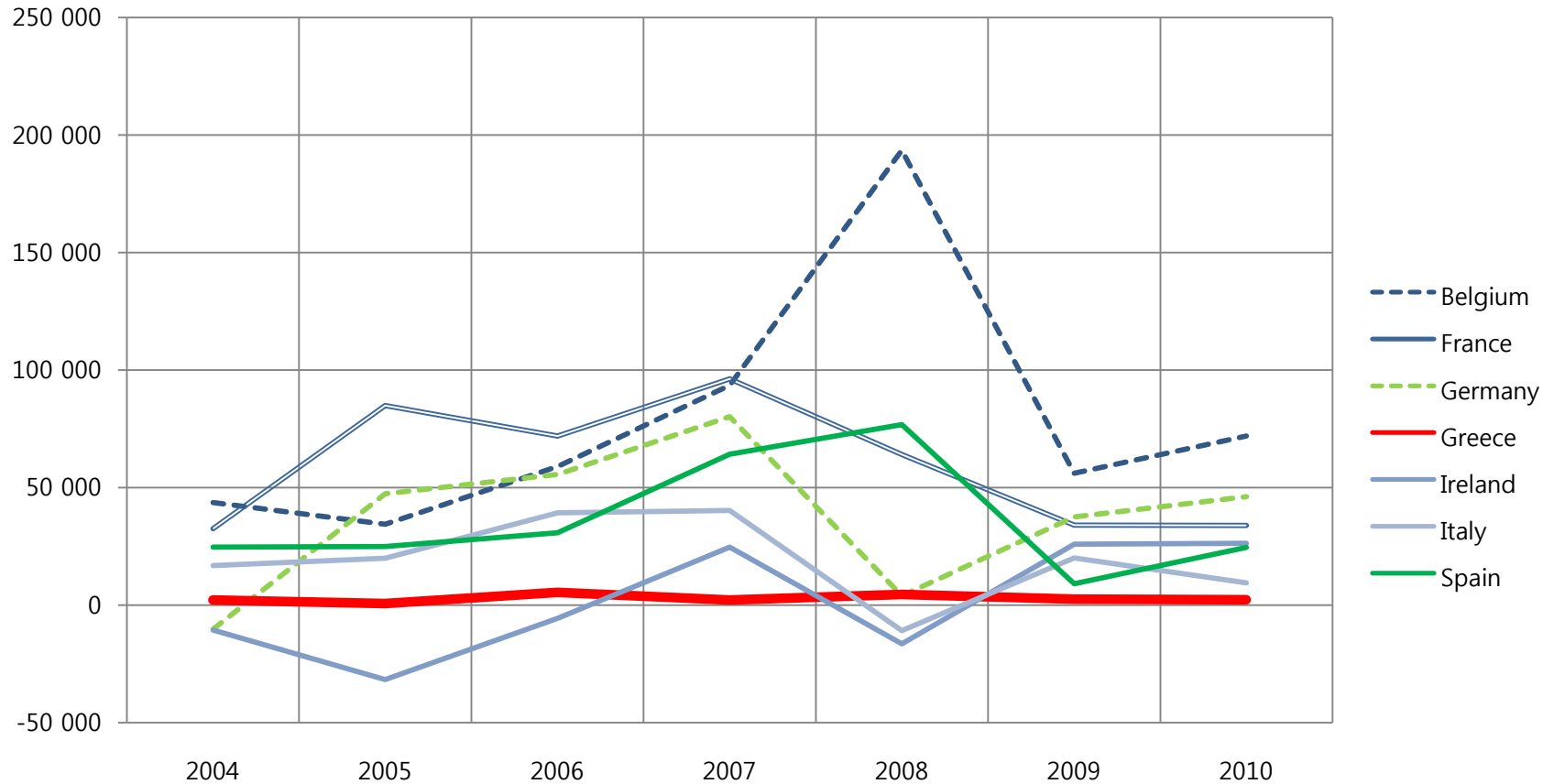
□ 취약한 투자자 보호와 투자 문제점

- 그리스의 투자자 보호순위는 15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FDI의 기피요인으로 작용
 - 투자가 보호 지수는 3.3점(10점 만점)에 불과하며 유로 국가 독일 5.0, 프랑스 5.3, 스페인 5.0, 이탈리아 5.7에 비해 부족한 수치
- 또한 복잡한 행정, 부패로 인한 설립관련 인허가 기관의 비효율성, 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원자재 조달과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변화(단위: million US dollars)



출처: OECD FACTBOOK 2011-2012

3.2 취약한 산업경쟁력

□ 노동력 문제

- Europe2020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그리스 노동시장과 고용 수준은 유럽 27개국 중 26위
 - 이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인재의 동원을 능력 측정
- 그리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이 상승하면서 민간기업도 고임금을 감수하게 됨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스의 노동비용은 독일보다 평균 25% 높았음
 - 기업들은 고규제-고임금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음
- 높은 인건비와 각종 법규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비용이 상당한 수준
 - 종업원 해고, 휴가제공, 법정 상여금 등의 추가 비용이 존재
 - 특히 공무원까지 보장된 노동자 파업 보장으로 인해 파업이 빈번히 발생
 - 공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에 저항하는 항만, 운송업자들의 파업으로 물류 문제가 수시 발생

3. 부정부패

3.3 부정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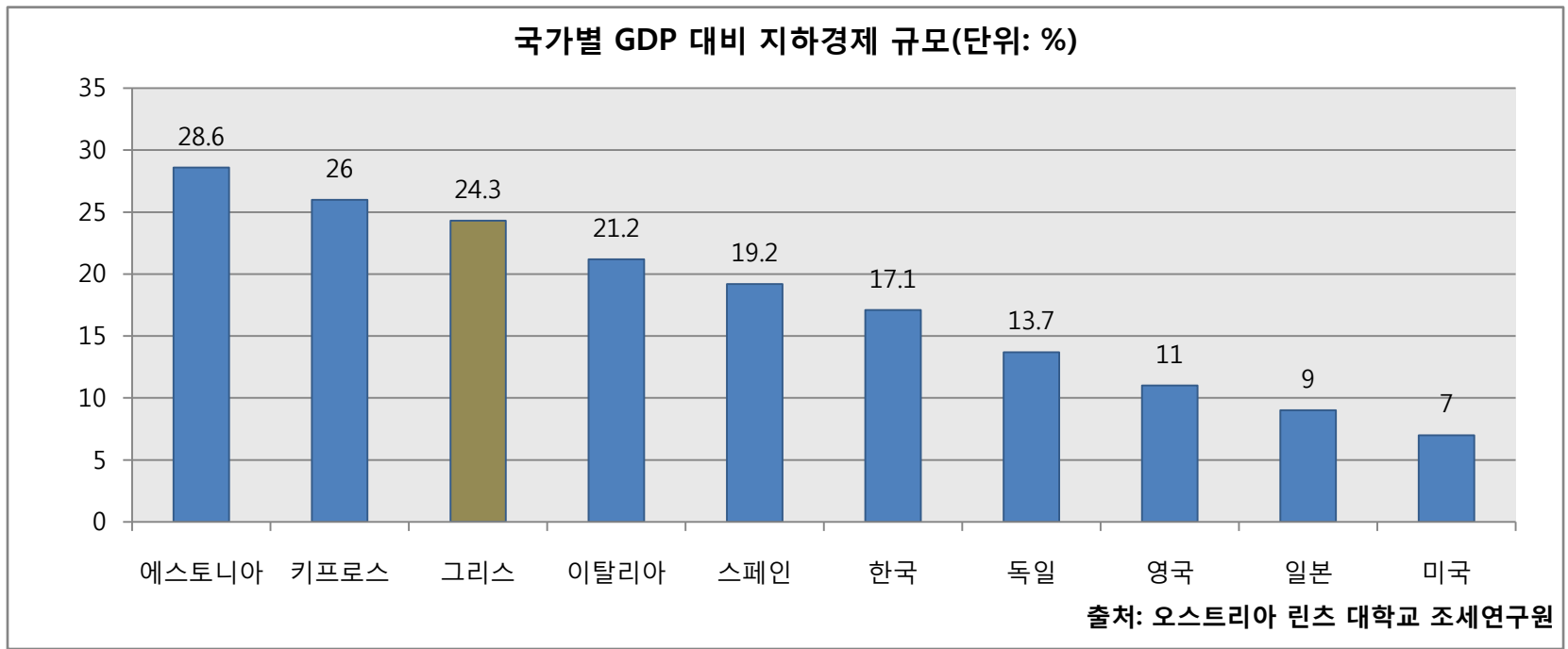
□ 그리스의 부정부패

- 부정부패 지수
 - 2011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3.4점을 받아 공동 80위에 오름
 - 이는 EU 국가 중 꼴찌인 불가리아보다 0.1점 앞선 수치임
- 파켈라키(작은 봉투)와 루스페티(연고주의)
 -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리스를 대변하는 단어로 Fakelaki와 Rousfeti를 들었음
 -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뒷돈을 주고 있음
 - 그리스 대부분의 정치인은 루스페티로 형성된 정치적 후원관계를 무시하고서는 선출될 수 없음
 - 2009년 8월 총선 바로 전 269명이 국토개발부에 고용되었고 그 중 18명은 개발부 장관의 친척이었음
 - 2009년 개장한 New Acropolis 박물관의 직원 대부분이 신민당의 문화부장관인 Antonis Samaras의 고향인 Kalamanta 지역 출신으로 밝혀짐

3.3 부정부패

□ 지하경제와 탈세

- IMF 총재 라가르드의 발언
 - “그리스 하면 탈세자들이 떠오른다”
- 그리스의 지하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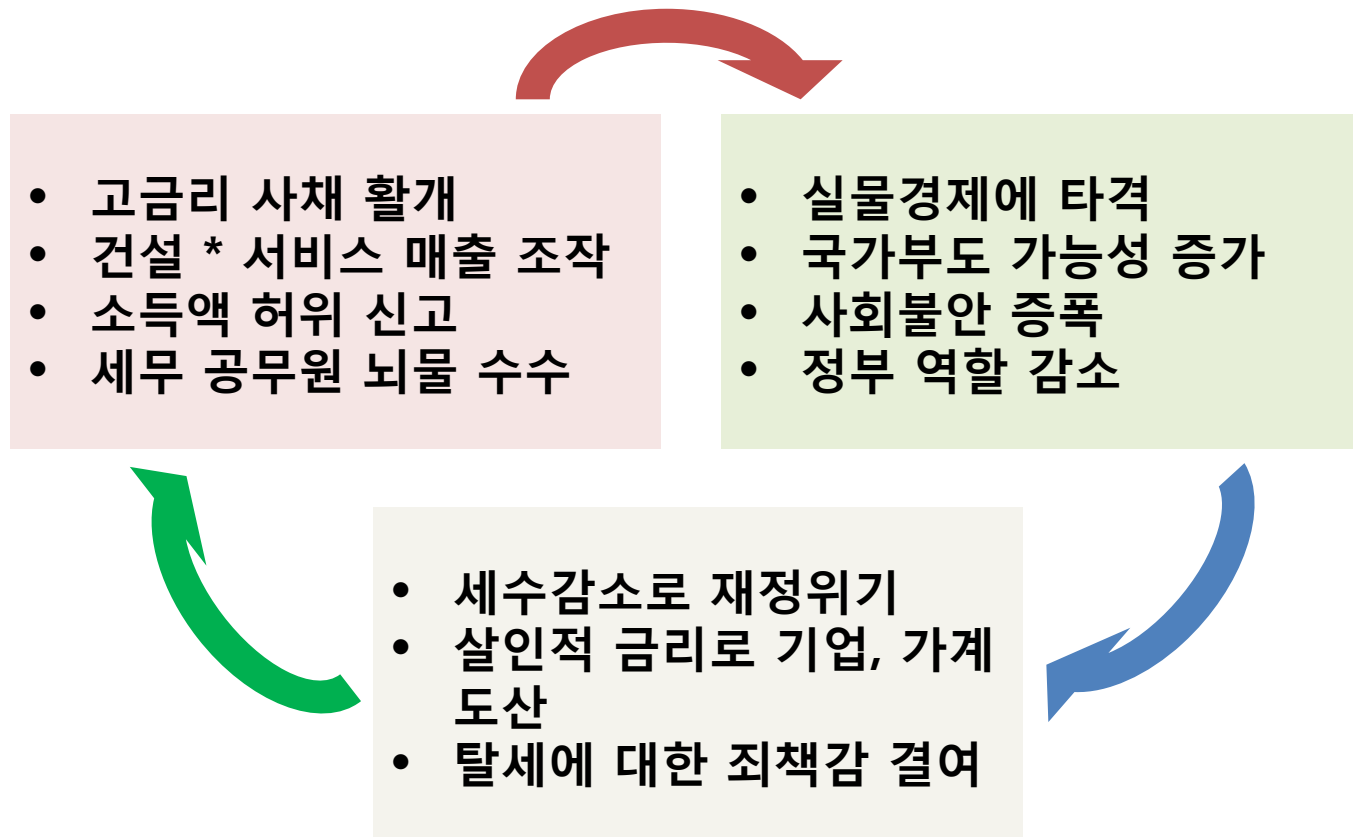
3.3 부정부패

□ 지하경제와 탈세

- 그리스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
 - 재정시스템의 낙후, 높은 서비스업(관광업) 비중과 고세율, 복잡한 세법, 과도한 규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그 이유가 됨
 - 또한 조세회피를 1960~70년대 군사정권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여기던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함
- 지하경제가 미치는 영향
 - 세수 감소를 초래하여 사회 공공재 품질 하락과 재정적자를 확대시킴
 - 결국 직, 간접 세율이 오르게 되고 다시 지하경제가 성장하는 악순환 되풀이

3.3 부정부패

□ 지하경제와 탈세



3.3 부정부패

□ 탈세 사례

- 세금을 내는 그리스인은 샐러리맨 뿐
 - 샐러리맨은 소득이 그대로 신고되기 때문에 세금을 충실히 낼 수 밖에 없음
- 자영업의 성행
 - 자영업자들은 탈세를 위해 현금 지불을 고집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음
 - 가판대 운영자에서부터 의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직종에서 탈세가 이루어짐
 - 의사들 중 2/3이 1년 소득을 12,000유로 미만으로 신고함
 - 탈세혐의가 적발되더라도 법원에서의 해결이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속이 있으나 마나임
-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
 - 그리스에는 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토지등기소가 없음
 - 부동산 과세는 신뢰성이 부족한 구식 산출공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실제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치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평가함

4. 기타 과도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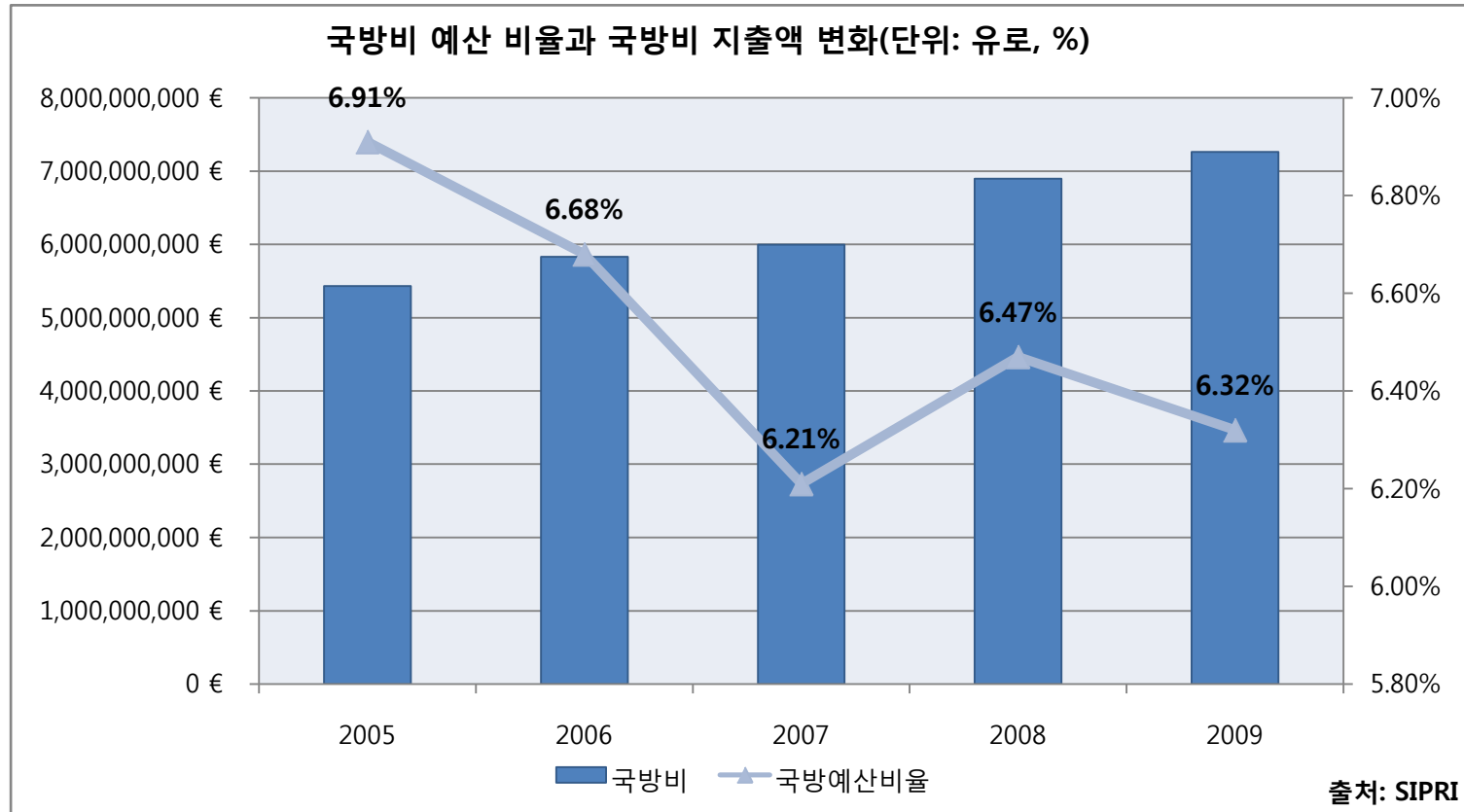
3.4 기타 과도한 지출

□ 기타 지출

- 그리스 국고 낭비의 사례는 주로 연금 부문, 초과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 국영 회사의 방만한 재정운영, 과도한 국방비 지출 등이 있음
 -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연금 과다지출과 고임금 문제가 발생함
 - 그리스 근로자들은 1년에 14번의 임금을 지급받음
- 그리스 정부는 과잉 채용, 적자를 기록하는 74개의 주요 국영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국영 철도회사는 2008년 9,000명의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고 8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함
- 그 중 국방비 지출은 특별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막대한 양의 국방비 지출은 그리스의 정치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한 것임
 - World Bank에 따르면 그리스의 2009년 국방비 지출은 총 지출의 6.32%

3.4 기타 과도한 지출

□ 국방비



3.4 기타 과도한 지출

□ 국방비

– 국방비 예산 관련 자료

- 무기수입 순위와 GDP 대비 무기수입가치(2004-2009)

무기수입 순위(단위: US \$ millions)		
1위	중국	13972
2위	인도	10625
3위	한국	8073
4위	UAE	7760
5위	그리스	6143
출처: SIPRI		

GDP 대비 무기 수입 가치(단위: %)		
1위	UAE	3.9
2위	그리스	1.7
3위	인도	0.92
4위	한국	0.87
5위	중국	0.32
출처: SIPRI		

- 그리스는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가장 큰 무기수입국가임
- #### – 지리적 문제와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그리스의 국방 관련 예산 책정은 타당성이 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3.5 결론

□ 결론

- 포퓰리즘
- 취약한 산업경쟁력
- 부정부패
- 기타 과도한 지출



IV. 유럽위기의 향후 전망과 한국경제

(CJ그룹 고문 김경원 박사)